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October vol. 118

디지털 자산의 진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가져올 재정의 변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불러온 디지털 금융 혁신과 재정·통화 정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FIS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October
vol. 118

재정 NOW

04
재정 칼럼
예금토큰, 해법이 아니라 토대다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및 재정관리 혁신
-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특임연구위원

18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기준

22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8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2
재정 캘린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불러온 디지털 금융 혁신과 재정·통화 정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자산 토큰화(RWA)가 글로벌 금융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화와 거래 비용 절감이라는 기회 속에서, 통화주권 수호와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나라재정 10월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가져올 금융 시장의 변화와 재정 관련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FIS 재정

70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72
재정정보원 소식

74
애독자 코너

재정 NAVIGATION

44
재정제도 이야기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
- **박정수** 이화여대 연구·대외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50
재정이 MONEY
현금 없는 사회, 돈의 미래가 바뀐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4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의 살림살이(1)
- **최주희** 덕성여대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62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성재 이시영, 나눔으로 지탱한 재정
-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예금토큰, 해법이 아니라 토대다[1]

한국은행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의 의의와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변화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테이블 코인·CBDC·예금토큰, 기술 외형보다 청구권과 원장 구조가 위험을 가른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작동하는가'에서 '쓰이는가'로

국고금 집행의 프로그래밍, 효율과 신뢰를 함께 설계해야

예금토큰은 토대일 뿐, 성패는 법·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들어가며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질문은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규율법(GENIUS Act)을 제정하였고,[2] 국제결제은행(BIS)은 같은 해 중앙은행 통화를 토대로 한 토큰화 금융시스템을 차세대 구조로 제시하였다.[3]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당초 예상되던 9월을 넘겼고, 국회 논의도 11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 한편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위에서 은행이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예금토큰의 실거래 테스트, 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26.7.15.)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거래 개시 시점은 당초 거론된 9월을 넘긴 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5]

1단계가 기술적 작동을 확인했다면, 2단계는 예금토큰이 일상 결제와 개인 간 송금, 국고금 집행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실험은 중앙은행 통화와 은행 예금으로 이루어진 기존 통화체계의 골격을 유지한 채 디지털 금융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장은 간명하다. 예금토큰은 해법이 아니라 토대이며, 2단계의 성패는 테스트 자체보다 뒤따를 법·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1. 세 가지 디지털 화폐: 기술 구조와 청구권의 차이

스테이블 코인, CBDC, 예금토큰은 모두 디지털 원장 위에서 이전되는 지급수단이다. 그러나 누가 발행하고 누구에 대한 청구권인지, 어떤 원장에서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뚜렷이 갈린다(<표 1>).

<표 1> 세 가지 디지털 화폐의 비교

구분	스테이블 코인	CBDC(기관용)	예금토큰
발행 주체	민간 발행사(은행·비은행)	중앙은행	상업은행
법적 성격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	중앙은행 부채	은행 예금채권
이용 범위	개인·기업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결제	개인·기업(은행 고객)
원장 구조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누구나 참여)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허가형 원장	중앙은행 허가형 원장 위에서 은행이 발행·이전
신원확인	지갑 주소 기반, 발행사·거래소 관리에 의존	참가 기관만 이용	은행 실명 계좌 기반
국경 간 이전	용이(외환 관리 우회 소지)	국내 참가 기관 한정	국내 이용 전제(실증 단계)
최종 결제	발행사 상환 약정에 의존	중앙은행 통화로 완결	기관용 CBDC로 은행 간 정산
자금의 소재	발행사 준비자산으로 이동	중앙은행 당좌계정	은행 대차대조표에 잔류

자료: 한국은행(2025.10.), BIS(2025), 한국은행(2026.3.18.)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1 본 칼럼의 프로젝트 한강 관련 사실관계는 한국은행(2026.3.18.)「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추진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1.9.)「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관련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2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 Pub. L. No. 119-27, 2025.7.18. 서명.

3 BIS (2025.6.24.), Annual Economic Report 2025, Chapter III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4 브릿지경제 (2026.9.28.),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9월 넘긴다…국회 논의 11월로 밀리나".

5 한경비즈니스 (2026.7.20.),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화…이르면 디지털화폐 9월 실거래".

기술 구조의 차이도 작지 않다. 첫째, 원장의 개방성이다. 해외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반면, 프로젝트 한강의 CBDC와 예금토큰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허가받은 기관만 참여하는 원장 위에서 움직인다. 둘째, 신원확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지갑 주소만으로 이전이 가능해 거래 상대방 확인과 자금세탁방지가 발행사·거래소의 사후 관리에 의존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의 실명 계좌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국경 간 이전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널리 쓰이면 원화 수요가 잠식되는 통화 대체와 외환 관리 우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결제의 완결성(한 번 이루어진 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최종 확정되는 성질)이다. 예금토큰 거래는 기관용 CBDC로 은행 간 정산되어 중앙은행 통화로 완결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상환 약정에 기대어야 한다. 끝으로 조건부 지급 기능(프로그래머빌리티)은 세 가지 화폐 모두 구현할 수 있으나, 조건을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가 다르다.

법적 성격의 차이는 더 근본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한다. BIS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체계의 중심 수단으로서 액면가 교환(단일성), 탄력적 유동성 공급(탄력성), 금융범죄 방지(무결성)라는 건전 화폐의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앞서 본 신원확인의 한계는 이 가운데 무결성 문제와 직결된다. 반면 프로젝트 한강의 CBDC는 소매용이 아니라 은행 간 결제에 쓰이는 기관용 화폐이며, 은행들은 이를 정산 수단으로 삼아 예금토큰을 발행한다. 중앙은행 통화가 최종 결제를 맡고 상업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제공하는 기존 이중(Two-Tier) 통화체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표시한 것으로, 자금이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는다.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예금토큰 상용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와 병행하고,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6] 필자의 연구도 예금토큰을 정산의 토대로 본다는 점에서 이 구상과 방향을 같이하지만, 두 화폐를 나란히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둘 사이의 전환 규칙까지 설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7]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에 한정하는 것도 은행에 대한 우대라기보다, 예금채권이라는 법적 성격상 발행 주체가 예금 수취 기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작동하는가’에서 ‘쓰이는가’로

2024년 10월 준비에 착수해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2025년 4~6월 일반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개설해 실생활 결제에 예금토큰을 사용하였다.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부상하면서 후속 단계 논의는 2025년 6월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6년 3월 재개되었다. 한국은행은

6 한국은행 (2025.10.),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7 이대기·김우진 (발간 예정),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8 금융위원회 (2026.7.15.),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보도자료.

2단계의 목표를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은행·사용처·한도·기능·사업 범위의 확대 내용은 <표 2>와 같다.[8]

<표 2> 프로젝트 한강 1단계와 2단계의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참여 은행	7개(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	9개(경남·아이엠뱅크 추가)
예금토큰 지갑 수	최대 10만 개	최대 50만 개
사용처	기존 가맹점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
지갑당 보유한도	100만 원(누적 500만 원)	1천만 원(누적 1억 원) 등
기능	결제	결제 + 송금
송금한도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1회 100만 원, 1일 500만 원 법인: 인터넷 1회 10억 원·1일 50억 원, 모바일 1회 1억 원·1일 5억 원
사업 범위	민간 결제	국고금 집행사업까지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2026.7.15.)



이 밖에 결제할 때 지갑 잔액이 부족하면 예금계좌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예금토큰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자동 입출금)과 생체인증 등 편의 기능이 개발되어 실거래 파일럿에 적용된다. 스마트계약(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지급 방식도 기존의 캐시백(환급) 외에 직접지급까지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등 혁신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처 쪽에서는 사업자가 비대면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하는 최대 4년 범위에서 운영될 계획으로 알려졌다.[9]

주목할 것은 한도와 자동 전환 기능이다. 지갑당 보유·송금 한도는 급격한 자금 이동을 늦추는 장치이고, 예금과 예금토큰 사이의 자동 전환은 두 형태의 돈이 같은 가치로 막힘없이 오가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다. 2단계에서는 지갑당 보유 한도가 1단계의 10배인 1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실제 쓰임새를 검증하려면 필요한 조치이지만, 한도가 자금 이동을 늦추는 완충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2단계의 성과는 이용자 수나 거래 건수만이 아니라, 이 장치들이 편의와 안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보이는지로 측정되어야 한다.

9 파이낸셜뉴스 (2026.7.20.), "예금토큰 상용화 속도내는 한은, 이르면 9월부터 무기한 실거래".

3.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변화: 계좌에서 토큰으로

2단계가 보여주는 변화는 지급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계좌이체는 은행 간 지급 지시가 먼저 처리되고 은행 사이의 자금 정산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토큰 방식에서는 원장 위의 토큰 이전 자체가 결제가 된다. 여기에 조건을 코드로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돈은 '보내는 것'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

변화는 화폐에서 자산으로 이어진다. BIS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은행 예금, 국채가 하나의 통합원장(화폐와 자산을 한 장부에서 함께 기록·결제하는 구조) 위에 놓이는 체계를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27년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은 이를 디지털 화폐 시스템 안에서 국채가 유통되고 기관용 CBDC로 결제되는 모델로 설명하였다.

한국은행은 2단계에서 예금토큰이 AI 에이전트, 토큰화된 증권 등 미래 디지털 자산의 지급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연구·검증하고, 디지털 화폐 인프라의 상용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려면 토큰화된 자산을 무엇으로 결제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화 결제 토큰을 시험하는 2단계는 BIS 구상을 국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선행 단계라 할 수 있다.



4. 재정 관점의 의의: 국고금 집행의 '프로그래밍'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고금의 디지털 화폐 집행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 목표로, 달성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첫 시범사업은 일반 계좌로 지급하던 보조금 일부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요건이 확인되면 현금화 가능한 토큰을 지급하여 부정 수급을 막고 정산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며, 업무추진비 지급도 연내 시범 부처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운영에서 이 실험의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집행 조건의 사전 설정이다. 사용처·기한·지급 조건을 스마트계약으로 미리 정하면, 사후 증빙과 환수에 의존하던 보조금 관리를 사전 통제로 옮길 수 있다. 2단계의 디지털 바우처가 그 예다.

둘째, 집행 경로의 추적이다. 교부에서 최종 사용까지의 자금 흐름이 원장에 기록되어 사후 검증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다.

셋째,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다.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예금토큰 시스템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연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실무 과제도 분명하다. 우선, 집행 기록 기준이다. 토큰이 수급자 지갑에 지급된 시점과 최종 사용·현금화 시점 가운데 무엇을 지출로 인식할지 정해야 예산 집행률과 결산 통계가 왜곡되지 않는다. 다음은, 잔액 처리다.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토큰을 자동 환수할

지, 회계연도 말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고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원장 간 대사(두 장부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맞춰 보는 작업)도 중요하다. 토큰 원장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록이 일치하도록 데이터 표준과 오류 정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금융안정과 정책 측면의 시사점

예금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금융안정 측면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용화에 앞서 짚어 두어야 할 과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자금이 머무는 곳과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문제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결제성 자금 일부가 은행 밖 발행사의 준비자산으로 옮겨 갈 수 있다. 대규모 상환 요구가 몰리면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고, 그 충격이 국채·단기금융시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 예금토큰은 자금을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긴다는 점에서 이 경로를 줄인다. 그러나 24시간 즉시 이전은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을 오히려 쉽게 만든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하루 만에 약 420억 달러의 인출 요청이 몰렸듯, 이동 비용이 낮아지면 예금 인출의 속도도 빨라진다. 은행 시스템 전체의 예금 총량은 보존되더라도, 요구불예금 의존도가 높고 고객 기반이 약한 은행일수록 유동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한도 조정 기준과 함께, 예금토큰 잔고를 유동성 규제에 반영하는 방식과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영업시간 중 결



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2)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예금토큰은 예금채권이므로 은행법상 예금 규율과 예금자 보호 체계에 포섭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2단계도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규제 특례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금자 보호 적용 범위와 보호 한도를 넘는 대규모 잔고의 취급도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이동 비용이 낮아진 환경에서는 보호 한도를 넘는 잔고가 가장 먼저 움직일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3)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한 체계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전환 규칙과 상호운용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같은 원화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보유하게 되어 화폐의 단일성이 흔들릴 수 있다. 앞서 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대체 문제도 같은 틀에서 다뤄야 한다. 또한, 2단계는 참여 주체가 은행에 한정되어 핀테크·빅테크의 직접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산 기반에 대한 비은행의 공정한 접근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안정을 위한 설계가 결제 혁신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겠다고 밝힌 것[10]은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4) 신뢰는 기술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예금토큰과 CBDC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려의 핵심은 거래 기록이 남는 화폐가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제도로 먼저 확정해야 한다. 첫째,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과 목적, 절차를 법률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지급 조건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명시하여, 특히 재정 집행에서 투명성의 수단이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금토큰은 현금과 기존 계좌이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수단이어야 하며, 이용 여부는 이용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맺음말: 테스트 너머의 설계

테스트의 성공이 곧 제도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2단계의 결과가 제도로 이어지려면 주체별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재정 당국은 시범사업 단계부터 정산 기간 단축, 부정수급 예방, 행정비용 절감, 수급자 만족도 같은 성과 평가 기준을 미리 공표하고, 그 결과를 국고금 집행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2단계에서 확인한 한도·자동 전환의 작동 결과를 상용화 규칙과 유동성 관리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화폐 체계로 묶는 전환 규칙, 예금자 보호 범위, 거래정보 보호 원칙을 함께 다뤄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화폐가 같은 가치로 오가고 위기에도 신뢰가 유지되는 구조를 설계할 때 완성된다. 예금토큰은 그 설계를 올려놓을 토대일 뿐, 설계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10 이데일리 (2026.9.30.),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한은 공동 협의체 담겠다'".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및 재정관리 혁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특임연구위원

디지털 결제수단 도입 확대로 지급결제 인프라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

디지털 결제수단은 재정관리를 사후 통제에서 사전 설계로 바꾸는 수단

부정수급 예방 및 정산 간소화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공공부문 마중물이 되기 위해 법적 기반 및 안정성 확보 필요



1. 서론

정부는 2026년 3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과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9월에 토큰화 대상을 조각투자 상품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최종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함께 결제하는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증권의 토큰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결제수단의 도입과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가 실질적인 효익을 거두려면 자산과 대금이 같은 원장 위에서 동시에 결제되는 디지털 결제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결제수단이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위에서 발행·유통되는 토큰형 화폐를 말한다.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은행예금을 토큰으로 바꾼 예금토큰이 대표적이며, 기존 지급수단과 달리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스마트계약으로 사용처·사용 기간·한도 등을 미리 지정해 두면, 조건이 맞을 때 지급이나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디지털 결제수단은 결제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해외송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아직까지 분산원장 기반 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등 한시적 특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용 절차의 편의성이 기존 간편결제에 미치지 못하고, 카드와 실시간 계좌이체가 발달한 국내 소매결제 환경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결제수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상적인 소매결제보다 조건 관리와 정산이 중요한 영역인 국고금 집행과 같은 부문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디지털 결제수단의 도입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이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구조를 살펴보고 디지털 결제수단의 활성화 과제를 검토한다.

2. 디지털 결제수단의 개념과 도입 사례

가. 디지털 결제수단의 도입 필요성

디지털 결제수단의 국내 도입은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제주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지급결제 인프라의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다. 우선 디지털 지급결제는 자본시장 토큰화에 대응할 온체인 결제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토큰화 증권의 효익은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를 통해 결제주기를 단축하고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는 데서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대금도 같은 원장 위에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쓰이는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채권 발행 대금 결제를 당일에 마쳤다.

또한 디지털 지급결제 도입을 통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조건부 자동집행, 실시간 정산, 원장 기반의 사후 검증 지원은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자금의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디지털 지급결제의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 인프라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적인 디지털 지급결제 도입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 논의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나. 해외 사례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디지털 결제수단 도입을 위한 공동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 및 공공부문에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2022년 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 1단계를 완료하고,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목적 한정 화폐(PBM: Purpose Bound Money)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부 바우처(가맹점이 사용과 동시에 대금 수령), 개인 지급금(은행 계좌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 기관 보조금(요건 충족 시 훈련기관에 자동 지급)의 세 유형에 PBM을 각각 시범 적용하였다. 참여 기관은 정부기술청(GovTech)과 DBS은행, OCBC은행과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직업훈련 지원기관(SkillsFuture Singapore)이다.

미국에서는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씨티은행,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등이 참여한 규제부채 네트워크(RLN: Regulated Liability Network) 실증에서 예금토큰과 wCBDC로 24시간 실시간에 가까운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률인 지니어스법 제정 이후 예금토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민간 분산원장 플랫폼과 기존 중앙은행 결제망을 잇는 폰테스(Pontes)를 2026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아피아(Appia)를 통해 토큰화 도매금융 생태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과 7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는 예금토큰과 wCBDC를 하나의 통합원장에서 운영하는 국가 간 지급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다.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예금토큰 시스템을 실험한 바 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 은행과 최대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1차 실거래에서 전자지갑 8.1만 개가 개설되었고, 예금에서 예금토큰으로 전환된 금액은 약 16.4억 원이었다. 이는 예금토큰의 상거래상 활용성과 스마트계약 기능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정집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디지털 바우처 실험이다. 서울시, 대구시, 신라대학교가 참여했으며, 수혜자가 예금토큰으로 결제하면 스마트계약이 사용처·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한 뒤 바우처 금액을 의뢰기관 지갑에서 이용자 지갑으로 즉시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이었다. 이용 금액은 약 6,500만 원으로 작았지만 전 과정이 설계대로 작동하였고, 한국은행은 정산 간소화와 사후검증 부담 경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하였다.

한계도 드러났다. 실제 구매는 활발하지 않았고, 결제 때마다 앱 실행과 지갑 활성화, 최대 3회의 비밀번호 입력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지적되었으며, 서울시 바우처는 정산 연계 개발 등에 시간이 걸려 실제 사용 기간이 한 달에 그쳤다. 무엇보다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이 마련되지 않아 한

시적 특례에 기대야 했다는 점은 제도화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실증을 토대로 2026년에는 국고금 집행에 디지털 결제수단을 직접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3월 업무협약을 맺고 3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첫 대상으로 정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며,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효과를 검증한다. 4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상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만 집행할 수 있으나, 이 특례로 사용 시간과 업종을 미리 정한 예금토큰으로 집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참여 은행 9개, 최대 50만 명으로 규모를 늘리고 개인 간 송금과 생체인증을 추가하며,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사가 참여하는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도 병행된다.

3.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재정지출 메커니즘

가. 현행 국고금 집행 구조와 한계

현재 국고금은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에서 각 부처 지출관 계좌를 거쳐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다. 보조금은 교부·집행·정산·검증이 따로 이루어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증빙 제출과 사후 정산을 거쳐야 알 수 있다. 그 결과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은 돈이 쓰인 뒤에야 드러나고, 환수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와 시간이 든다. 여러 기관의 장부를 사후에 맞춰 보는 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고, 재정당국이 집행 효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정부구매카드로 쓰는 업무추진비도 심야·주말 사용을 사후에 소명받는 방식이어서 사후 통제 성격이 강하다.

나.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재정지출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집행의 핵심은 집행 조건을 사후에 검증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폐 자체의 속성으로 미리 심어 두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과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집행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금 공급: 국고 계좌의 자금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은행으로 이전되고, 은행 간 결제는 wCBDC로 처리된다.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 화폐로 이루어진다.

② 조건 설정 및 토큰 발행: 집행기관이 사용처, 사용 기간, 건당 한도 등을 정하면 이를 반영한 스마트계약이 제3의 기관의 검증을 거쳐 등록되고, 조건이 붙은 예금토큰이 발행된다.

③ 교부: 토큰이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의 전자지갑으로 지급된다. 조건이 풀리지 않은 토큰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④ 집행 및 결제: 수급자가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스마트계약이 조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사용처는 대금을 즉시 받는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결제는 처음부터 거절된다.

⑤ 정산 및 환수: 거래 승인과 동시에 원장에 기록되어 기관 간 장부 대조 없이 정산이 끝나고, 기한이 지난 잔액은 자동 환수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집행 데이터로 집행률, 사용처 분포 등을 바로 파악해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한다.

다. 기대효과와 한계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재정집행은 부적격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부정수급과 용도 외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 기간과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사용처는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프로젝트 한강에서 예금토큰 결제에는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2~3일 소요되는 대금 회수가 즉시 이루어졌다.

반면 조건이 미리 고정되어 예외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분산원장 시스템 장애나 스마트계약 오류 같은 새로운 운영 위험도 생기며,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절감 효과보다 작은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4. 향후 과제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이 시범사업을 넘어 재정관리의 상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실증은 혁신금융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라는 한시적 특례에 의존하고 있다. 상시적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수단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고금 관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디지털 결제수단을 국고금의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조건부 토큰의 지출 인식 시점, 미사용 잔액의 환수 처리, 스마트계약 오류 시 책임 소재 등 세부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

국고금은 공공성이 높은 자금이므로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국고금 집행은 wCBDC를 최종 결제자산으로 하고 규제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현행 설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화 이후 상호운용성 확보 수준을 보아가며 활용 범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예산 배정부터 결산까지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 dBrain+),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기존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기능의 효익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집행 조건을 설정하고 변경하는가에 달려 있다. 조건 설정 권한과 변경 절차, 스마트계약의 사전 검증 주체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축적되는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범위와 활용 목적을 법령으로 한정하여, 재정 투명성 제고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한강의 경험은 기술적 작동 가능성과 실제 이용 확산이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인증 절차 간소화, 기존 결제 단말기·PG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사용처 확대, 개인 대상 사업의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기존 지급 방식과의 병행 운영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효익이 명확하고 위험이 통제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처가 명확한 사업자 대상 보조금에서 시작하여 관서운영비, 개인 대상 바우처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채 토큰화와 연계한 국고 자금관리로 나아가는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사전에 정의하고 기존 방식과 비교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정 분야 시범사업의 비용편익을 입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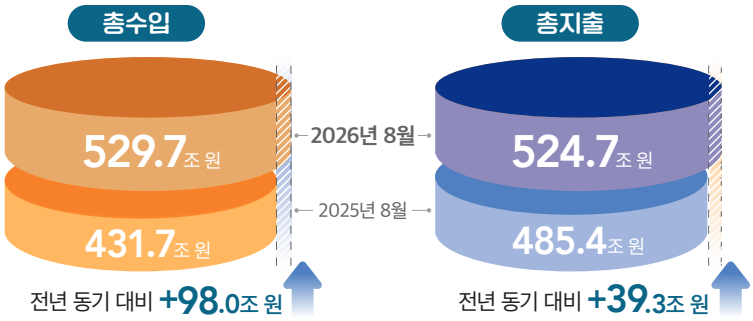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은 카드나 계좌이체의 대체재가 아니라 재정 관리를 사후 통제에서 사전 설계로 바꾸는 수단이다. 2026년 시범사업은 이러한 전환을 실제 재정사업에서 검증하는 첫 단계이다. 성과가 입증되고 법적 기반과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디지털 결제수단은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시장 토큰화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공공부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내외

2026년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5.0조 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58.8조 원 증가 (흑자 전환)

관리재정수지
43.0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45.3조 원 감소 (적자 개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8.1조 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13.5조 원 증가 (흑자 확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372.1조 원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

전년말 대비
104.0조 원 증가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8월 말 잠정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구성항목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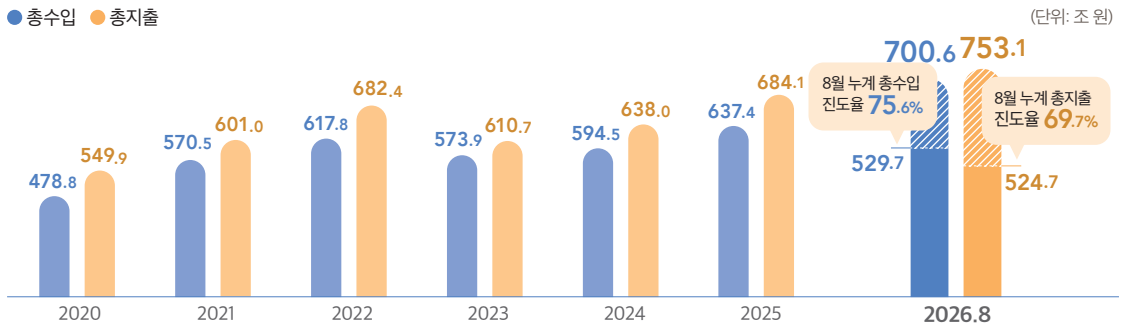
9월 국고채 발행규모
17.4조 원
경쟁입찰 기준 17.0조 원

26년도 누적 발행액
179.7조 원[1)]
연간 총 발행한도의 8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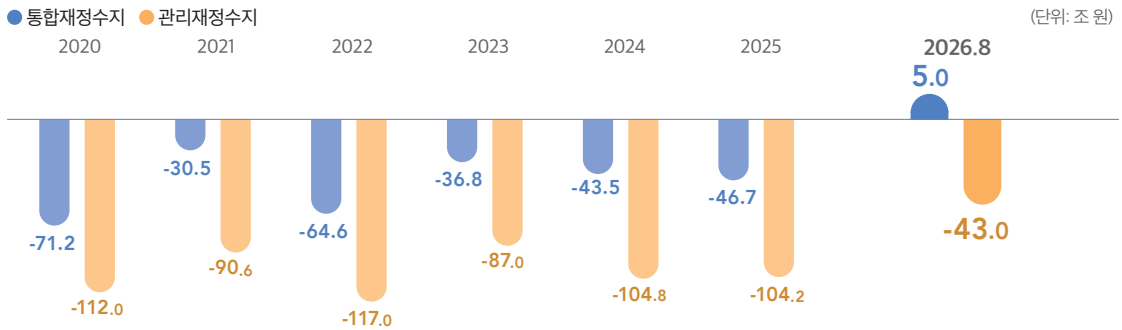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319.6조 원
전월 대비 3.7조 원 감소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1.5조 원 포함시 181.2조 원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한도액 225.7조 원 중 개인투자용 국채 2.0조 원 제외 기준
3 국채시장 항목은 10월호 수록 기준 2026년 9월 자료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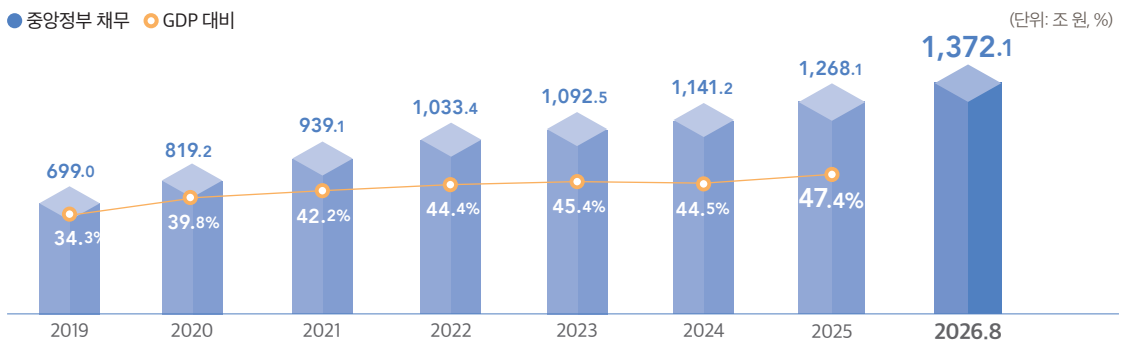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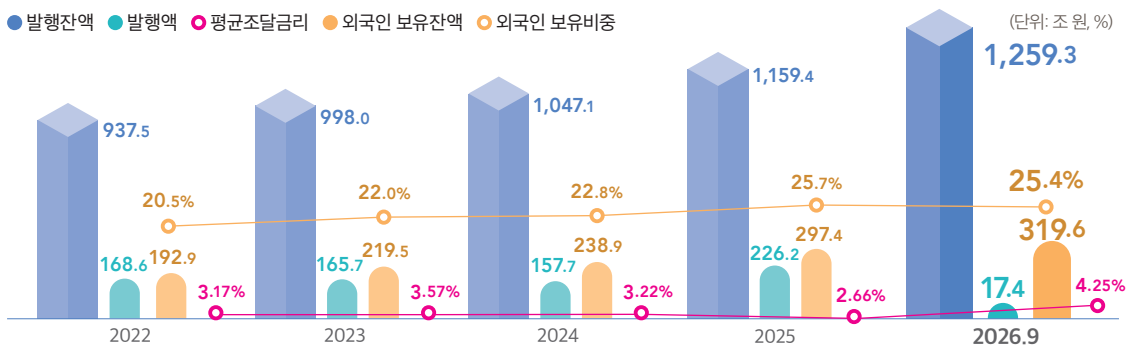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8월 말 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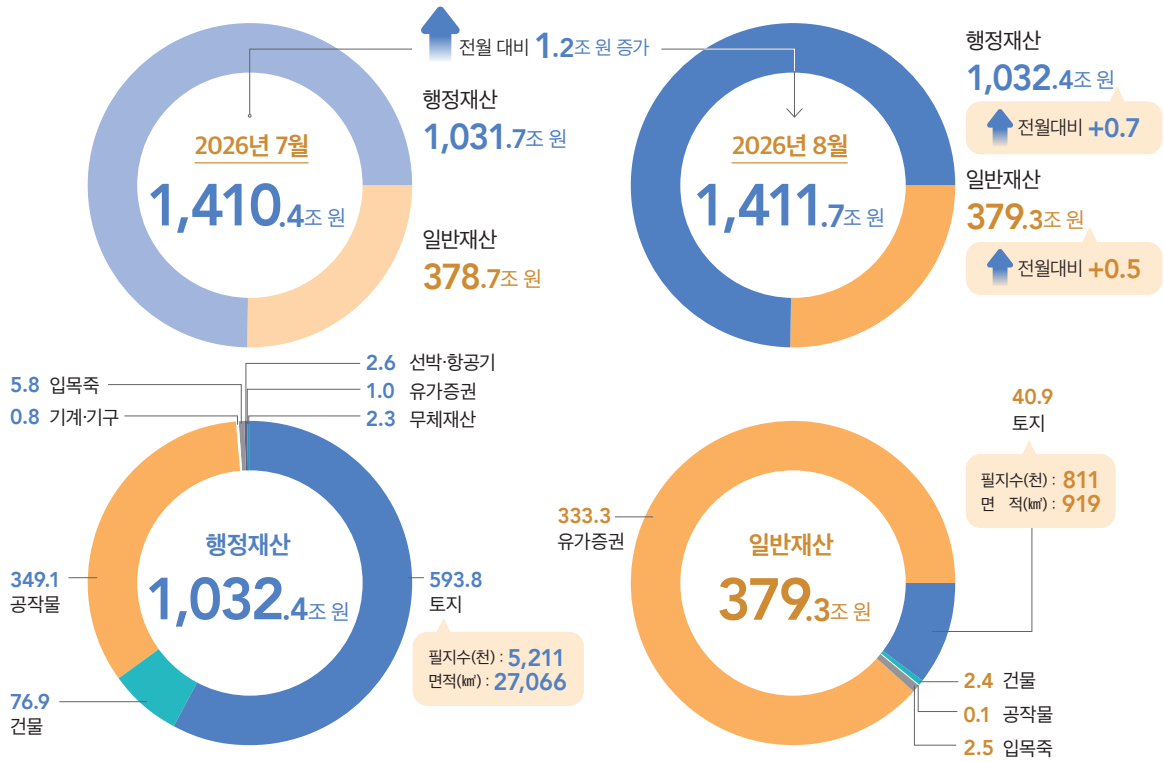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8월 말 잠정 기준





국유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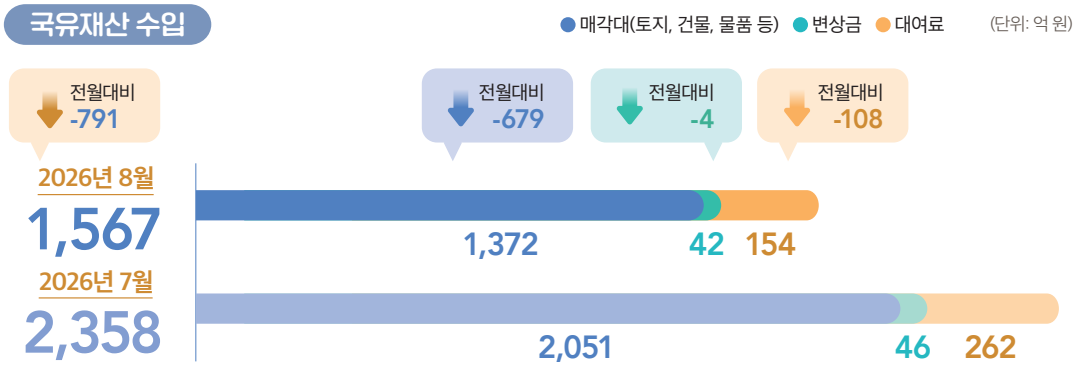
국유재산 현황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시: 청·관사, 도로, 하천 등)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국유재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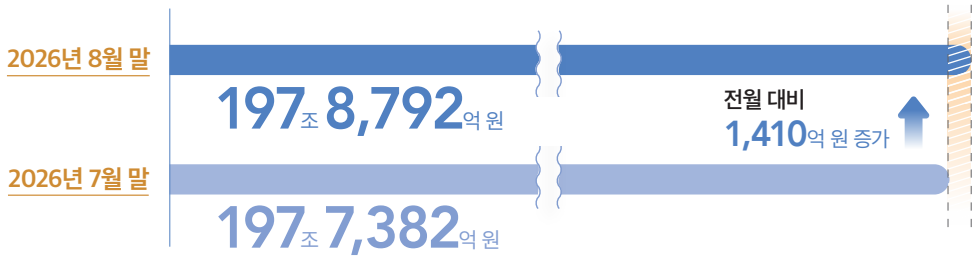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3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
4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정부출자

정부출자금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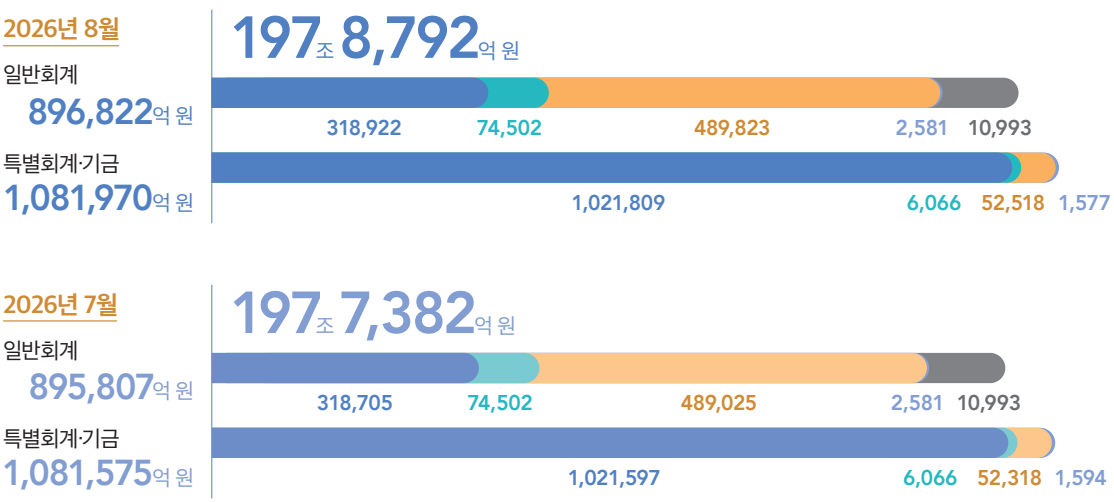
(단위: 개)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기관수	15	7	7	12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출자금 세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 미지정

(단위: 억 원)



주 2026년 6월 신규 설립된 한미전략투자공사 공공기관 미지정 상태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10월호에서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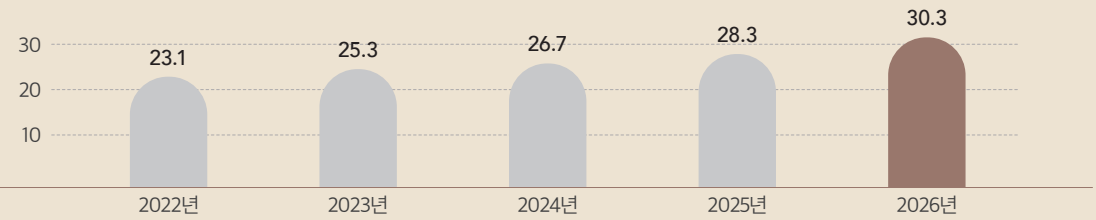
인사혁신처

임무 :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

비전 : 활력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30.3조 원** 중 성과관리 대상 **1.5조 원**(4.8%)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Ⅰ	우수 국가인재 채용	196	1.3%	1
전략목표 Ⅱ	공무원 인재육성	802	5.5%	2
전략목표 Ⅲ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28	0.2%	2
전략목표 Ⅳ	인사혁신 제반여건 조성	104	0.7%	1
전략목표 Ⅴ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	13,378	92.2%	2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수
5	7	8

지표 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0	0	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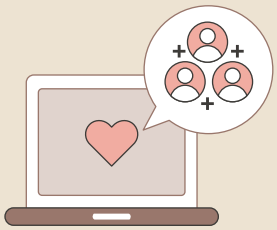
인사혁신처

우수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인재 채용



프로그램 목표 공정·투명한 국가공무원 채용

선정 사유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국민체감도, 성과 달성도,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프로그램 목표인 우수인재 선발에도 기여

주요 추진 전략

-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
- 효율과 공유·개방에 기반한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 채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채용제도 개선
- 공정채용 문화 확산 추진
- 공무원 채용정책 수요자와의 현장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196억 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에 대한 응시자 종합 체감도	89.0점	89.6점	100.7%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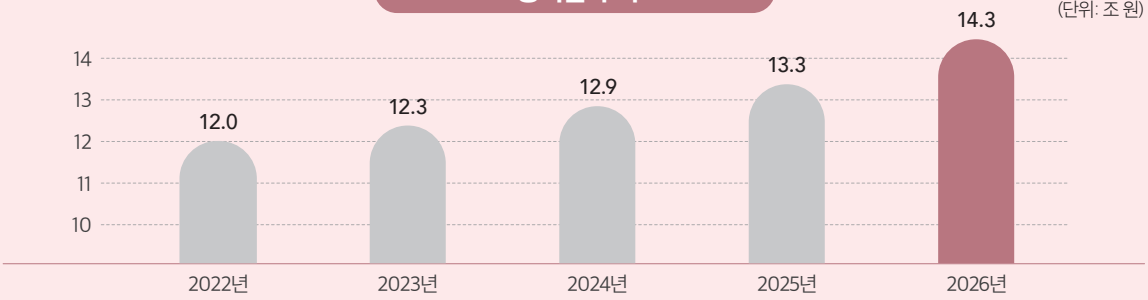
경찰청

임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14.3조 원** 중 성과관리 대상 **1.4조 원**(9.9%)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Ⅰ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4,371	31.1%	3
전략목표 Ⅱ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3,227	23.0%	3
전략목표 Ⅲ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 현장 대응력 강화	1,250	8.9%	3
전략목표 Ⅳ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 글로벌·과학치안	5,208	37.0%	3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4** > 프로그램 목표 **10** > 성과지표 수 **12**

지표 성격

투입 **2** / 과정 **0** / 산출 **0** / 결과 **10**

경찰청

우수 프로그램

범죄 예방 및 치안 상황 대응 강화

프로그램 목표 범죄예방대응 역량과 재난 등 위험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

선정 사유 국정과제 관련, 종합계획 수립(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사업 확대, 지자체 조례 제·개정,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지표 역시 최근 연속으로 목표 달성

주요 추진 전략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유지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623억 원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하향지표)	343초	343초	100.0%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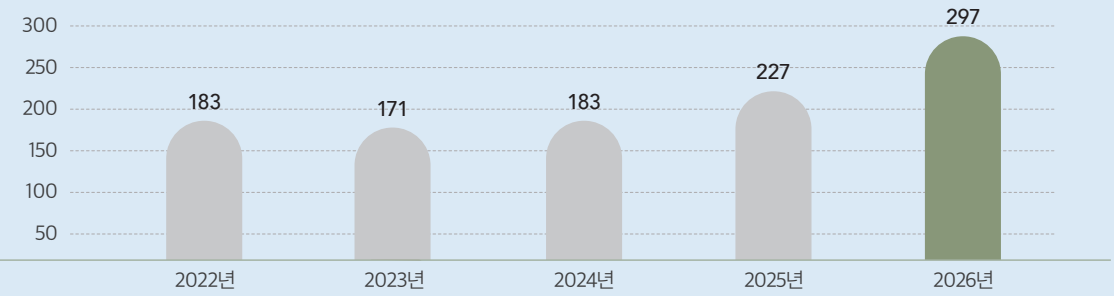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임무 : 엄정하면서도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선진 수사 기구로서의 전범을 제시한다

비전 : 고위공직자 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공정사회를 이룩한다

총지출 추이

(단위: 억 원)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297억 원** 중 성과관리 대상 **161억 원**(54.2%)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Ⅰ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수사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한다	161	100.0%	1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수
1	1	1

지표 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0	0	0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수 프로그램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 목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선정 사유 사업추진을 통해 KICS 고도화 구축 및 유지관리 통한 개선사항 반영, 디지털 증거능력 무결성 확보노력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추진 전략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161억 원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 체계 이용 만족도	88점	91.3점	103.7%



주요국 월간 재정 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조 8,455억 달러 △7.4%	6조 8,110억 달러 △2.8%	1조 9,656억 달러 적자 
독일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633억 유로 △2.5%	3,339억 유로 4.7%	676억 유로 적자 
일본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조 6,288억 엔 △1.5%	45조 6,659억 엔 8.1%	30조 372억 엔 적자 
프랑스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86억 유로 3.1%	3,630억 유로 4.4%	1,344억 유로 적자 
영국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607억 파운드 5.4%	5,463억 파운드 4.9%	856억 파운드 적자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August 2026 (2026.9.30.)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August 2026 (2026.9.22.)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2026년 7월) (2026.9.18.), 일반회계 기준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août 2026 (2026.10.6.),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August 2026 (2026.9.22.), 중앙정부 총경상수입·총지출 및 순차입 기준

대한민국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29.7조 원 22.7%	524.7조 원 8.1%	5조 원 흑자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0.

해외재정동향(10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 재무부의 바이백(Buyback) 확대에도 불구, 금리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성 논란
- 행정부의 회계연도 말 예산 집행 보류에 회계감사원 (GAO) 위법 판단

02 독일

-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발표
- 독일, 2026~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03 프랑스

- 프랑스 정부, 2027년 경제성장률 1% 전망 및 재정 운용 여력 축소
- 프랑스 정부, 증세 중심의 2027년 예산안 발표 및 재정적자 감축 추진
- 프랑스 국채금리,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며 차입 부담 확대

04 영국

- 8월 재정적자 확대, 회계연도 누적 차입도 정부 전망 초과
- 영국, 예산 발표 앞두고 재정준칙 강조, 차입비용 상승에 재원 확보 압박
- 영국 2분기 성장률, 기존 추정치에서 0.5%로 상향 조정됐으나 성장세는 둔화

05 일본

-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 1.25%로 인상
- 다카이치 총리, 일본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강조

06 중국

- 중국 국무원, 거시정책 강화 및 효과적인 투자 확대 추진
- 중국,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보조 시행

국제기구

01 OECD

- OECD, 장기모형을 활용한 장기 재정과제 분석 (Illustrating long-run fiscal challenges using the Long-Term Model) 워킹페이퍼 발간
-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6) 발표

02 IMF

-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전하는 불안정한 세계 경제를 헤쳐 나가는 길

주요국 동향



미국

9.16.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1)]

-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9월 1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3.75~4.0%로 조정**
  - 이번 조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의 금리 인상이자 지난 5월 말 케빈워시 의장 취임 이후의 첫 금리 변경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결권자 1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
  - 연준의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며, 장기국채는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
- **연준은 지속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2%) 복귀 시점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최근 미국 경제는 관세 인상,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 AI발(發) 자본지출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물가 압력이 높게 유지
  - 워시 의장은 소비 및 생산성 향상, 활발한 설비투자 등으로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필요성을 강조
  - 수정 경제전망을 제출한 정책위원 18명 중 16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추가적 긴축 가능성도 시사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며, 이번 금리인상 결정 이후에도 미국의 높은 신용도를 근거로 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구

9.24. | 재무부의 바이백(Buyback) 확대에도 불구, 금리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성 논란[2)3)]

-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Buyback) 상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 규모가 상한에 못 미치면서 정책 목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
  - 미 재무부는 9월 24일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한 채권 매입 조치의 일환으로, 20~30년 만기 국채 40억 7,800만 달러를 매입 결정
  - 앞서 재무부가 최대 매입 규모로 60억 달러를 공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104억 6,800만 달러 규모를 매도 신청한 바 있어 이번 매입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거래가 적은 기존 국채를 투자자가 원활히 사고팔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주요 목적인 유동성 공급을 달성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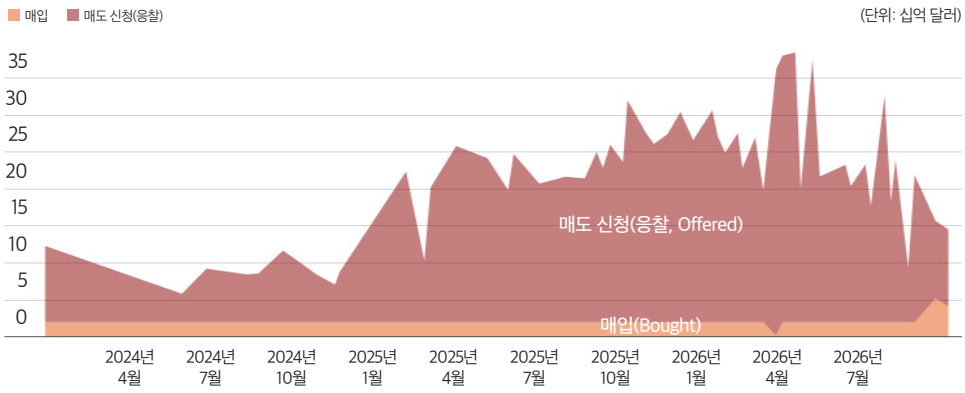
---

1) https://www.reuters.com/business/warshs-words-may-matter-more-than-anticipated-fed-rate-hike-2026-09-16/
2) https://www.reuters.com/world/us-treasury-accepted-4078-billion-buyback-operation-2026-09-24/
3) https://www.reuters.com/legal/transactional/treasurys-smaller-than-expected-buybacks-fuel-debate-over-aims-2026-10-01/

- 매입대상 채권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극도로 낮은 금리로 발행된 저금리 채권으로, 현재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어려워진 채권이 주요 대상임
- ING 미주지역 리서치 책임자 가비는 채권 매입조치 발표 직후 장기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스왑 스프레드(민간 대출 금리 지표인 SOFR 대비 국채금리)는 축소되었음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채권들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표면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단기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어, 정책 효과성에 대한 혼란 지속**

국채 매도 신청(응찰) 대비 매입 규모



자료: 미 재무부

9.29. | 행정부의 회계연도 말 예산 집행 보류에 회계감사원(GAO) 위법 판단[4)]

• **미 백악관은 9월 25일,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약 8억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의회에 집행 보류 발표**

- 행정부는 예산 지출 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에 따른 집행 보류 권한을 활용해 회계연도 종료 직전까지 자금 집행을 막는 이른바 '포켓 리시전(주머니 속 삭감)'을 추진

* 포켓 리시전(Pocket Rescission)이란 대통령이 회계연도 종료(9월 말)에 임박해 배정된 예산을 삭감(또는 취소) 요청함으로써 의회가 대응할 시간 없이 예산이 만료되도록 하는 위법적 행위를 의미하며, 정식 법률적 용어는 아님

- 집행 보류 요청 예산 8억 1,000만 달러 중 대부분이 이민 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HHS)의 비시민권자 서비스 예산(5억 6,700만 달러), 국토안보부(DHS) 불법 체류자 복지 지원 예산(1,500만 달러) 등이 해당
- 이번 요청은 회계연도 종료일인 9월 30일을 불과 5일 앞두고 제출됐으며, 하원도 11월 선거로 휴회 중이서 의회 조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

• **행정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미 회계감사원(GAO)은 의회의 승인 없이 배정된 자금을 만료일 이후까지 보류하는 것은 예산 집행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단**

- 이후 여러 주정부와 교육·주거 지원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일부 주거상담 보조금의 사용기한 만료를 일시 정지하는 등 논란 지속

4) https://time.com/article/2026/09/26/what-is-a-pocket-rescission-inside-trump-s-move-to-cancel-810-million-in-federal-funding/



독일

9.30. |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발표[5)]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은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속보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발표**
  - 지난 8월 확정치(2.9%) 대비 0.4%p 재반등한 수치
  - 중동 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4.9% 폭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 주도

  *8월 기준 10.5% 상승, 7월 기준 8.3% 상승
-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하여 전월 수준을 유지**
  - 에너지발 물가 충격을 제외한 내수 물가 상승 압력은 제어되고 있음을 시사

10.1. | 독일, 2026~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6)]

- **독일 연방정부는 최신 경제 전망에서 2026년과 202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 2026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4월에 발표한 0.5%에서 1.3%로 0.8%p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7년 경제성장률 역시 기존 0.9%에서 1.1%로 0.2%p 상향 조정함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가 0.3% 증가하는 등 상반기 경제 성과가 우려보다 견조했던 점이 전망치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 **정부 재정 투입 및 수출 반등이 성장을 견인했으나, 내수 및 투자 회복은 제한적**
  - 부채 준칙(Debt Brake) 개혁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공공 인프라 지출 및 연방방위군(Bundeswehr) 전력 증강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올해 수출 성장률이 3.7%를 기록하며 경기 반등 주도
  - 반면, 민간 소비와 기업 설비 투자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며, 입지 조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는 미해결 상태라고 진단
- **에너지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 시행**
  - 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26년 2.7%, 20227년 3.0%로 각각 상향 조정함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정부는 유가 폭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리터당 0.17 유로 일시 인하하기로 결정

5) https://www.destatis.de/EN/Press/2026/09/PE26_348_611.html
6)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government-raises-forecasts-2026-2027-source-said-2026-10-01/



프랑스

9.11. | 프랑스 정부, 2027년 경제성장률 1% 전망 및 재정 운용 여력 축소[7)]

- **프랑스 통계청(INSEE)이 2026년 성장률을 0.4%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 경기회복을 예상하며 2027년 실질 경제성장률 1.0%로 제시**
  - 정부의 2026년 성장률 전망도 당초 1.0%에서 0.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INSEE는 성장의 모든 동력이 정체된 것으로 평가
  - 정부는 2027년 완만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2027년 성장률에 대한 이월효과는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적자 감축에 어려움 가중**
  -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7월 이후 약 50% 상승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물가 상승으로 사회급여 및 에너지 지원 지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
  -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4.4%까지 상승해 2026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기존 전망보다 최소 4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26년 재정적자는 최선의 경우 GDP 대비 5.1%, 최악의 경우 5.4~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는 지출 삭감·증세·공공자산 매각 등이 재정 대응 방안으로 거론

10.1. | 프랑스 정부, 증세 중심의 2027년 예산안 발표 및 재정적자 감축 추진[8)]

-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기 위한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세입 확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 2026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4%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20억 유로, 구조적 조정 기준 약 150억 유로의 재정 절감이 필요
  - 공공부채 이자비용과 연금 지출 등의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약 430억 유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
  - 세금·사회보험료 등 의무부담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27년 44.2%로 3년 연속 상승할 전망
- **개인·기업의 세금 및 부담금 인상과 지방정부의 지출 억제**
  - 병가수당·퇴직금 과세 조정,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10% 세제 혜택 축소, 초가공식품 및 에어비앤비 관련 과세 등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고 조세 사기 단속으로 10억 유로를 추가 회수할 계획
  -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910억 유로로 1년 동안 120억 유로 증가하고, 지방정부에도 54억 유로의 재정적 노력이 요구될 전망
  - 주거보조금·가족수당 동결, 고소득 연금의 물가연동 제한, 병가급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나, 의회 과반 부재로 예산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

7) 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6/09/11/french-government-bets-on-modest-economic-recovery-in-2027_6757416_5.html
8)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6/10/01/french-government-s-draft-budget-relies-on-tax-hikes-to-take-back-control-over-public-finances_6758135_7.html

10.2. | 프랑스 국채금리,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며 차입 부담 확대[9)]

- **프랑스 정부의 2027년 예산안 발표 직후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국가채무 조달비용이 확대**
  - 프랑스 재무부는 장기 국채 120억 유로를 발행했으며, 매수 주문은 발행 물량의 두 배를 넘었으나 10년물 발행금리는 4.93%까지 상승
  - 9월 평균 발행금리 4.32%, 8월 6일 발행금리 3.86%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p 이상 상승
  - 유통시장 금리도 4.95%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1.4%p 상승
- **미국발 금리 상승과 프랑스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이 결합하면서 국채시장 취약성 확대**
  - 미국 금리 상승,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인공지능 기업의 차입 확대 등이 전 세계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
  - 프랑스는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국가채무가 크고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금리 변동에 특히 취약한 국가로 평가
  - 다만 현재까지 유동성 문제나 주식시장 급락은 발생하지 않아 즉각적인 채권시장 붕괴로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



9)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6/10/02/debt-storm-hits-france-as-interest-rates-reach-highest-level-since-2002_6758177_19.html



영국

9.22. | 8월 재정적자 확대, 회계연도 누적 차입도 정부 전망 초과[10)]

- **9월 22일 통계청(ONS)이 발표한 공공재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183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보다 29억 파운드(19.0%) 증가했으며, 예산책임청(OBR) 전망을 35억 파운드 상회**

  * 공공부문 순차입은 일정 기간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규모를, 순채무는 특정 시점의 부채에서 유동성 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

  - 8월 차입 규모는 물가를 조정하지 않은 명목 기준으로, COVID-19 시기인 2020년에 이어 역대 8월 중 두 번째로 컸으며,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
  -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898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으나, 총지출은 1,031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보다 5.0% 증가
  - 중앙정부 국채 이자 비용은 88억 파운드로, 명목 기준으로 월별 기록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8월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21억 파운드는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조정분에 해당

- **2026~27 회계연도 개시 5개월간(4~8월) 누적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정부의 공식 전망을 초과**

  - 누적 순차입은 773억 파운드로 전년도 동기 대비 22억 파운드(2.7%) 감소했으나, OBR 전망보다 81억 파운드 높은 상태
  - 동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은 전망치 대비 74억 파운드 많았으며, 이 중에서 사회보장급여·연금 지출과 국채 이자 비용이 각각 24억 파운드와 20억 파운드의 초과분을 차지
  - 8월 말 공공부문 순채무는 약 2조 9,855억 파운드로 전년도 대비 785억 파운드 증가했으나, GDP 대비 비율은 93.8%로 전년보다 1.3%p 하락, 이는 명목 GDP가 순채무보다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ONS)

9.28. | 영국, 예산 발표 앞두고 재정준칙 강조, 차입비용 상승에 재원 확보 압박

- **존 힐리 재무장관은 9월 28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10월 28일 발표할 첫 예산의 중심에 재정준칙을 두겠다고 강조[11)]**

  - 높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이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재원을 잠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년도 예산에서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와 국가채무 관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정부의 편성 방향을 제시

  * 다만, 구체적인 증세 항목이나 지출 조정 규모는 10월 28일 예산에서 발표 예정

  - 글로벌 채권시장 매도세로 영국 정부의 차입비용이 상승하면서, 10월 예산 발표를 앞둔 재무장관의 부담 증가[12)]

10)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august2026
11) https://tradingeconmomics.com/united-kingdom/government-budget-value/news/577128
12) https://www.reuters.com/video/watch/idRW536825092026RP1/

• **정부는 예산 발표일을 10월 28일로 공지하면서 기존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원과 권한을 이전하는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13]
  - 향후 2027년 예산 발표를 앞두고 차입비용 상승과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 상존

*재정 여력: 재정준칙을 충족하면서 추가 지출이나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9.30. | 영국 2분기 성장률, 기존 추정치에서 0.5%로 상향 조정됐으나 성장세는 둔화[14]

• **통계청(ONS)은 9월 30일 국민계정 수정치를 발표하고, 2026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5%로 집계했으며, 기존 추정치인 0.4%에서 0.1%p 상향 조정**[13]
  - 1분기 성장률은 0.6%로 유지되어, 2분기에도 경제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전분기보다 성장 속도는 둔화
  - 지출 측면에서의 2분기 성장은 주로 순 무역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목 GDP는 2분기에 전기 대비 0.8%, 전년도 동기 대비 3.8% 증가

*명목 성장률은 물가 변동을 포함하므로 실질 성장률 0.5%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함

•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과거 연간 성장률도 수정되어, 영국 경제의 성장 흐름을 함께 재평가**[15]
  -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은 1.2%로, 이전 추정치보다 0.1%p 하향 조정

일본

9.18. |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 1.25%로 인상[16]

• **중앙은행은 지난 9월 17~18일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1.0%에서 0.25%p 인상을 결정**
  - 새 운영 지침은 9월 24일부터 적용함
  - 표결에서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 포함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반대 위원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이 2%를 밑돌고 경제 상황도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일본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며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일부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AI 관련 수요 증가와 정부의 각종 정책 등이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함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dget-to-move-power-and-money-out-of-westminster-and-into-every-postcode-around-britain
14)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quarterlynationalaccounts/apriltojune2026
15)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
16)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918a.pdf; https://www.boj.or.jp/en/mopo/mpmsche_minu/opinion_2026/opi260918.pdf

- 원유 가격상승, 엔화 약세 등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기업 간 거래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임금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남

•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나 금융 환경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만큼 완화적**
- 중동 정세, AI 관련 수요 확대, 환율 변동 등이 일본의 경제 활동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함
- 일본의 실질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 경제 활동 및 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 금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앞으로도 경제 및 물가 전망과 위험을 살펴보면서 금리 조정의 시기와 속도를 검토할 예정임
-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 정도에서 안정시키며 향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0.5. | 다카이치 총리, 일본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강조[17]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재정건전성 병행 다짐**
- 총리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을 추진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함
- 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제하고, 경제·금융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
-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정책 등을 재검토하고, 성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장기 재정지출은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

• **일본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 고조**
- 최근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4.235%까지 상승하였으며,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이 일본 국채 매도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의 정부부채는 경제 규모의 약 2배에 달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로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고 있음
-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또한 내년도 예산을 둘러싸고 각 부처가 사상 최대 수준의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재정 확대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지속되고 있음

• **총리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민과 시장에 신중하게 전달해 재정정책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언급**
- 연간 국채 발행량을 억제하고 세수와 금리, 부채 조달 비용, 경제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함

17) https://www.reuter.com/world/asia-pacific/takaichi-pledges-fiscal-discipline-japans-debt-bill-rise-2026-10-05



중국

9.28. | 중국 국무원, 거시정책 강화 및 효과적인 투자 확대 추진[18)]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거시정책의 효과 제고와 경제·사회적 효과가 높은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
  -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응해 거시정책의 경기역행적 조절을 강화하고, 연간 경제·사회 발전목표 달성을 추진
  - 기존 정책의 집행 효과를 높이고 각종 채권의 발행과 자금 사용을 가속화할 방침
- **주요 사업의 조기 착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
  - 제15차 5개년 계획과 '6대 네트워크' 시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노후 저수지와 곡물창고의 개보수를 추진
  - 투자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대출 이자보조 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배분 구조를 최적화
- **지방정부 채무 잔여한도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성장 및 내수 활성화를 지원**
  - 지방정부 채무 잔여한도를 활용하고 과학기술 혁신·기술개조, 농업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재대출 한도를 확대
  - 부동산시장 안정과 고용·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투자 승인 효율화를 추진

9.29. | 중국,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보조 시행[19)]

- **중국 재정부는 주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 주택대출 이자보조 정책을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취급은행이 새로 공급하는 첫 주택 구입 목적의 상업성 개인대출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 구입 주택은 건축면적 120㎡ 이하, 가격 150만 위안(약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 주택대출 원금에 대해 연 1%p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
  - 가구당 이자보조 대상 대출원금은 최대 100만 위안으로 제한
  -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우선 1년간 시행하며, 해당 기간 중 새로 취급된 요건 충족 대출에 적용
- **재정정책과 주택금융정책을 연계해 실수요자의 주택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
  - 이자보조 재원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각각 90%와 10%를 부담
  - 성급 이하 지방재정 간 분담비율은 성급 재정부서가 지역 실정에 따라 결정

18)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609/content_7082280.htm
19) https://jrs.mof.gov.cn/zhengcefabu/phjr/202609/t20260929_3998312.htm

국제기구 동향

OECD

9.30. | OECD, 장기모형을 활용한 장기 재정과제 분석(Illustrating long-run fiscal challenges using the Long-Term Model) 워킹페이퍼 발간[20]

- **OECD는 35개 회원국 및 가입 후보국을 대상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격차를 분석**
  - 장기 재정격차(Long-run Fiscal Gap)는 현재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정부부채 비율을 현재 수준 부근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 규모를 의미
  - 장기 재정전망에는 연금·보건·장기요양 등 고령화 관련 지출과 국방비 증가 전망, 정부의 기타 기초지출 등을 반영
- **별도의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대상국 중간값 기준으로 2060년까지 GDP 대비 4.7%p의 재정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 국가별 재정격차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현재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 일부 국가는 취약한 초기 재정상황으로 인해 중간값보다 큰 폭의 재정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인구 고령화가 연금·보건·장기요양 지출을 증가시켜 장기 재정압력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취약한 초기 재정상황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재정압력을 더욱 가중
  - 경제·재정 관련 주요 가정과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별 장기 재정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

9.23. |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6) 발표[21]

-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2.9%, 2027년 3.0%로 전망하고,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가격 상승을 주요 하방위험으로 제시**
  - 미국의 성장률은 2026년 2.2%, 2027년 2.1%, 유로지역은 양 연도 각각 1.0%로 전망
  - 중국은 2026년 4.5%, 2027년 4.2%, 한국은 각각 3.7%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ECD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
  - 광범위한 가격보조나 감세는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 한국이 발표한 에너지 지원대책의 재정비용은 OECD가 파악한 조치 기준으로 GDP의 최대 0.7% 수준으로 추산

20)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illustrating-long-run-fiscal-challenges-using-the-long-term-model_421bf86f-en.html
2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interim-report-september-2026_f751d02b-en.html

• **높은 정부부채와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해 신뢰성 있는 다년도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을 억제하거나 성장·분배 효과가 높은 분야로 재배분하고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조세지출 축소와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세입을 강화하면서 향후 경제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

IMF

9.30. |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전하는 불안정한 세계 경제를 헤쳐나가는 길[22)]

*「IMF Annual Report 2026: Navigating a Precarious World – Working together to foster strength, resilience, and growth」

•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회복력 강화와 성장 기회 모색**
  - 2025년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충격과 무역체계 변화에도 민간 부분에서의 대응력, 재정·통화정책 지원, 기술 관련 투자 덕분에 세계 경제 성장은 유지되었고, 물가상승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함
  - IMF는 2026년 초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함
  - 그러나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으며 공급망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는데, 세계 공공부채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각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함
  - 중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구조적인 요인이 경제성장 전망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높은 성장경로로 이끌 잠재력을 지님

• **재정(Fiscal), 공공부채 증가와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지출 우선순위 강화**
  - 공공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급등과 재정 긴축, 경제성장 둔화로 각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정 취약성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킴
  - 정부의 이자 비용과 국방비 증가가 교육,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부채 발행 증가가 투자 자금을 감소시켜 저소득 국가들은 개발원조 삭감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중기적으로 공공 재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엄격하게 재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채 상환과 성장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2) https://www.imf.org/annual-report/2026/?cid=imfvideo-com-compd-ARIEA2026001; https://www.elibrary.imf.org/display/book/9798229042741/9798229042741.xml?cid=lk-com-elib-popular_title&tab_body=contentSummary-145737

- **인공지능(AI), 노동자와 국가,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동시에 위험이 공존**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AI 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아시아는 AI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하지만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을 하락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IMF 연구에 따르면, AI 관련 기술이 필요한 종사자의 소득은 더 높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
  - 기업 측면에서는 대규모 AI 투자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업 가치 하락, 자산 손실, 직원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 기업에서 금융 문제가 발생하면, AI 산업 전반으로 파급 위험이 큼
- **무역과 성장(Trade and Growth), 공급 충격 속 세계 경제의 회복력 약화와 대처**
  -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의 관세 등 무역정책의 변화로 기업과 국가가 공급망과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면서 글로벌 교역 구조가 재편됨
  - 특히 호르무즈 해협 폐쇄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감축을 초래했으며,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무역·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무역장벽도 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 각국에서는 무역과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기회를 모색하며 회복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또 다른 심각한 국내외 불균형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음

  *IMF 분석에 따르면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충격과 금융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조정의 위험을 높임
-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 지속적인 확장으로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창출**
  -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결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토큰화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주요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제도화하고 있음
  - 자국 통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체계와 지급결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IMF 총재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중기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불안정하고 복잡한 환경에 직면한 세계 경제는 건전한 재정정책을 비롯한 AI 생산성 향상, 공급망 균형, 금융혁신 등 정책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음



10

2026 October

| 재정 |

정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 원 추가 지원 (기획예산처 9.29.)

- 정부는 9월 29일(화)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
-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한시 지원 중
-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 9월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기획예산처,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기획예산처 10.1.)

- 기획예산처는 10월 1일(목)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한 지방정부의 공공시설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
- 지역 인프라 확충,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 후 지방정부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행정비효율 및 재정누수 심화
- 기획예산처는 우선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종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하여 구조적 원인 분석 후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
-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시민단체·감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인으로 이루어진 합동 연구진이 구성됐으며, 10월 중 평가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
- 기획예산처는 향후 도출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한편,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마련에 적극 연계할 계획

| 경제 |

정부, 1,000조 원 투자로 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나아가는 K-GX 본격 가동 (재정경제부 10.7.)

- 정부는 10월 7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
-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
- K-GX 전략은 ❶신성장동력 K-GX(기술혁신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❷모두의 K-GX(지역 역량 활용 및 소외되는 계층 없는 상생 전환), ❸지속가능한 K-GX(정부의 마중물 지원 및 신뢰성 있는 정책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민간의 투자생태계 조성) 등으로 구성
-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기 위한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❶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❷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❸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❹국민 주거공간의 GX 4대 분야로 구성
- 행사에서는 ▲핵심 청정 발전 소재,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한화큐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포스코홀딩스),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LG전자·삼성전자 공동) 프로젝트 발표
-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하여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3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4월

| 재정 |
-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확정
- 2025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6월

| 재정 |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
-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7월

| 재정 |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더 이상 행정 권한을 나누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재정 분권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과제다.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율성과 지역 간 격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광역통합과 지방교육재정 개편까지 재정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 재원 배분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방향을 짚어본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6.3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지난 6월 선거가 아홉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부계층간재정제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헌헌법을 마련했고 그 이듬해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 때 전면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 과정에 주민주권이나 지역의 경쟁력과 같은 이슈보다는 전국적 이슈에 휘말리는 모습은 미성숙의 증거로 아쉬움이 남는다.

분권이란, 말 그대로 한 곳에 집중된 권한과 그에 동반된 책임을 분산함을 뜻하는 개념으로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재정적 분권은 상위정부로부터 낮은 단계의 정부에게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선호와 환경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모든 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경우보다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방은 경쟁하고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반응성과 이동성을 통해, 또는 허시먼(A. Hirschman)이 이야기한 투표와 이탈(Voice or Exit) 기제를 통해 시장에서 사적재를 선택할 때와 같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서비스 지



출책임이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게 주어짐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책임성 또한 증진된다. 이론이 그렇다.[1]

양적으로는 1990년과 비교해 지방재정의 규모가 18.75배나 급증했고 전체 재정지출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맞물려 재정분권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대표적인 문제로 지방재정의 대폭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40.89%에 불과하다. 지난 8월 5일 경기도지사의 재정비상선언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은 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문제, 주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문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간의 갈등 문제 등으로 현실에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 국가로 우리와 시스템이 매우 상이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의 책임성 차원에서 근간이 되는 세금인 재산세가 다른 여타 세원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남은 지출수요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모든 지방정부 세원의 종류와 세율을 국회가 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까지 중앙정부가 정하는 제도는 지방분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정부들이 탄력세율제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암묵적인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보다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한 국고보조금이 더 비중 있게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이론에서 강조하는 편익과 비용간의 연계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1 대표적인 지방재정이론으로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정리와 티부(C. Tibout)의 발로 하는 투표이론을 꼽는다. 전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공공재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세금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 선호를 표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론이다.

2 경기도는 인구(약 1,400만 명)와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외형적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과 자체 세원의 한계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구조적 한계와 역설이 경기도의 재정 부족 상황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도로, 교통, 복지, 교육 등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반면 서울에 비해 자체 수입(지방세 등)의 비중이 낮으며, 그마저도 취득세 등 부동산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세목에 치중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 경기도 세입은 직격탄을 맞는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복지 및 민생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 비율 분담)을 요구한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비 부담액(의무적 경비)이 전국에서 가장 커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이 극도로 제약된다.

1. 정부계층간재정관계 제도혁신

이재명 정부의 정부계층간재정관계 구조조정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이미 이해관계자가 형성되어 있어,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근거와 함께, 기득권을 설득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늬만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부처의 권한을 유지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 차원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과 '책임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첫째, 현재의 특정목적보조금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가 세부 항목을 정해주는 '꼬리표 달린 예산'이다. 과감히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 개별 사업별로 내려주는 보조금을 지역개발, 복지, 교육 등 큰 덩어리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세세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세부 사업 관리 인력은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 있다.

둘째, 진정한 지방세 확충을 통해 재정 자립을 제고해야 한다. 보조금 비중을 낮추고 지방 스스로 걷는 세금을 늘려야 중앙부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세 등 국세 항목 중 일부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해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에 로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세금을 걷어 쓰는 구조가 되면 주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차이가 큰 경우 지자체 간에 직접 재원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즉 공동세(Shared Tax)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국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그중 일부를 재정력이 강한 지자체(수도권)가 약한 지자체로 직접 이전하는 '공동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할 '입법·행정권'을 넘겨야 한다. 포괄적 사무 이양을 통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허가권과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행정 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조직 구조조정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폐지하고 기능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부처의 기능 재설계(Restructuring)가 긴요하다.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가면 중앙부처의 역할은 '집행'에서 '기획 및 평가'로 바뀌게 된다. 지방 이양으로 인해 할 일이 줄어든 중앙부처의 하부 조직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기회가 된다. 이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심판'의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다. 돈과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정부간관계는 권한에 대한 쟁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부처 간 협의, 중앙정부와 시도간 협의가 아니라, 국가 통치 차원의 강력한 분권화 특별법이나 헌법적 가치로 추진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작금 논의되는 헌법개정 기회를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기회로 살려보면 좋겠다.

2. 광역통합의 과제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70년 이래 지속되었고 결국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성 증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 및 농어촌의

생산성 감소 추세가 주도해왔다. 서울 인구는 약 930만 명이다. 도시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쾌적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쾌적한 도시로만 모여들지는 않는다. 도시가 커질수록 통근시간과 주거비가 높아지고 이러한 혼잡비용이 도시의 편익을 넘어서면 주민이 줄어들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5개 초광역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간 통합제도 도입이 진척된 것은 비수도권의 생존 전략으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상향식(Bottom-Up)' 추진 방식이 가진 내재적 한계와 행정적·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상향식 통합의 한계와 갈등 관리다. 상향식은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 이기주의(NIMBY) 및 주도권 싸움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청사 소재지, 명칭, 핵심 인프라 유치 등을 놓고 지자체 간의 극심한 갈등이 발생한다. 행정 공백 및 불확실성으로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통합에 매몰될 경우, 실제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공무원 조직 내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광역 거버넌스'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중앙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무늬만 통합'을 방지하고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역부족이다. 재정자립도 문제로 통합된 메가시티가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예산 편성권과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대규모 가난한 지자체'가 될 뿐이다. 가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득세 중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을 통해 통합 지자체에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외 대응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지원에 주목한 정치적 합의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 주인공인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 통합 과정이 주민 투표나 충분한 공청회 없이 정치권의 결단으로만 흐를 경우, 통합 후에도 주민들의 소속감 저하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통합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주민 투표 등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권역 내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메가시티 내부에서도 거점 도시(광역시)와 주변 소도시·농어촌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빨대 효과(Straw Effect)로 통합 후 인프라와 일자리가 특정 거점 도시로만 쏠려, 주변 중소도시가 오히려 더 빠르게 쇠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5극 3특' 전략 내에서 거점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상생 발전 모델(교통망 연계, 공공기관 분산 배치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통합특별시특별법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했다. 우려하던 다원화된 청사체계, 행정비용 및 접근성 문제, 농산어촌의 소외감, 유사중복기관조정의 마찰, 무엇보다 초기 재정지원의 착시효과와 자체 세원 확보한계 문제가 남았다.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타당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시행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20.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으로 반도체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1년 새 무려 130조 원 가까이 증가해 중장기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계획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104.2조 원으로 규모의 문제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다. 지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6.5%에서 48.8%로 3배 증가했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나랏빚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 비기축통화국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주요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부채도 올해 778조 원을 돌파하고 4년 새 219조 원 증가해 2030년 997.4조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 저출산 추이 등을 감안해 당연히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지출구조조정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것이 지방교육재정부문이다.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3~17세 학령인구는 2000년 1,138만 명, 2026년 536



만 명에서 2070년 247만 명으로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칸막이 방식 재정배분 구조로 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해 교육재정 총량이 결정되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의 교육예산을 보장함으로써 보편교육 확산에 크게 기여했던 제도이지만 이제는 재원 낭비의 원흉이 되고 있다. 지역의 자산인 학교를 유지하는 비용이 지역주민에 의해 부담되지 않고 중앙정부로 전가되는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2000년 이후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계속 늘려왔으나 일본은 학교 수도 거의 같은 비율로 축소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이렇게 교육수요자 변화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계적 세수 연동 방식의 폐해는 고등교육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전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에 추월당했는바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동일한 비용으로 더 큰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총량 산정부터 성과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계적으로 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은 전면폐지하고 단위학교 표준교육비용을 총액 배분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내에서 지방교육비를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다행하게도 정부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내국세 연동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초중고로만 집중되던 재원을 대학 및 영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다각화하고 지출항목과 산정기준도 현실화해 학생맞춤통합지원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운영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자체 상호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수평·수직적으로 재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세수 변동성 증대, 학령인구 급감 및 초고령화,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소멸위험지역 간의 상반된 행정 수요 등으로 인해 제도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 세수 변동성에 따른 지방재정 불확실성, 국고보조 사업의 과다한 지방비 매칭 부담, 행정 수요 측정 기준의 비현실성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적립된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문제로 지방의 반발이 상당하다. 차제에 지방재정운용의 전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포괄보조금 확대, 교육과 일반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재정칸막이 해소, 지방재정안정화계정 및 기금운용의 법제화를 통한 경기 변동 방지 대책 마련 등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기초해 지방재정의 틀을 재구조화하는 수준의 혁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배분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결과에 대해 누가 설명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 돈의 미래가 바뀐다

현금 사용 감소와 디지털 화폐의 확산은 화폐의 형태뿐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거래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현금이 '얼마나 적게 쓰이는가'만이 아니다. 디지털 결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할 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금과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금(Cash)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1] 현금은 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신뢰받는 물건이자, 개인의 사생활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급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계좌이체와 지급카드에 이어 모바일 지급서비스와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현금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1950년에 다이너스클럽 카드(Diners Club Card)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1958년에 은행이 신용카드(Credit Card)를 선보였을 때도, 1966년에 최초의 직불카드(Debit Card)가 소개되었을 때도, 1972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ACH(Automated Clearing House)를 도입해 계좌이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할 때도 현금이 이처럼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고,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2]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이 거의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수표와 어음을 활용했으며, 국제 무역에서는 신용장을 사용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이 발달하면서부터는 계좌이체와 지급카드(Payment Card)를 사용한다. 소액 거래에서 현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 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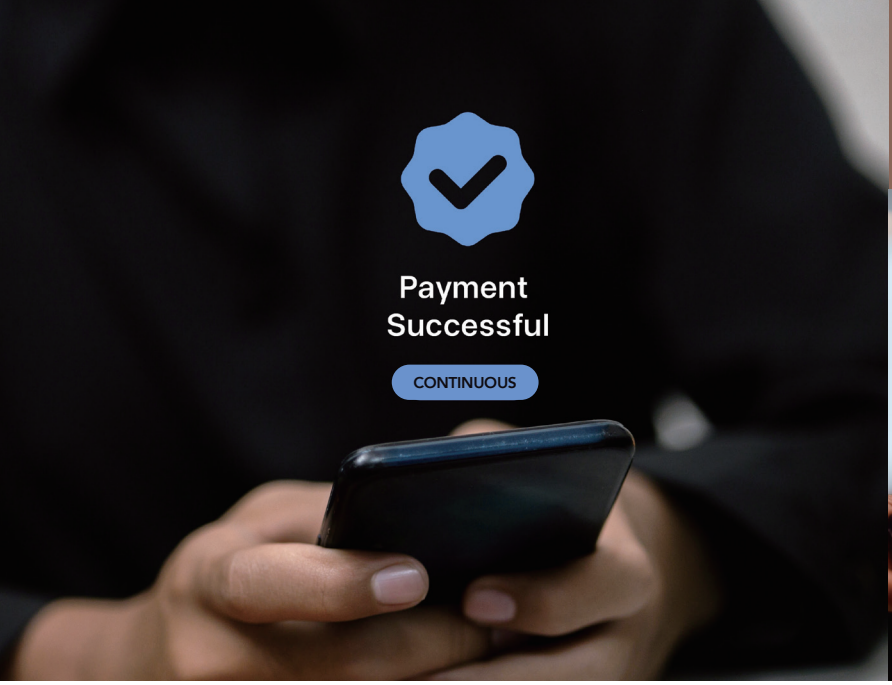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202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 간 지급에서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ACH 계좌이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Wire Transfer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 거래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한 카드지급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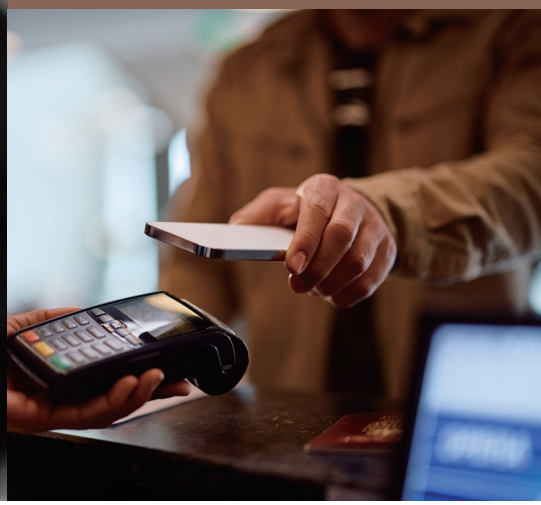
1 현금이란 대개 중앙은행 등이 발행하는 법정화폐(legal tender)를 의미하나, 본 고에서는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물리적 화폐(physical money)까지 포괄한다.

2 Prieg, L. and Desai, M., 2024, Would a cashless society be a better one? J.P.Morgan×WIRED Consulting, Payments Unbound Vol. 5.

3 Albers. T, Baird, S, Hayashi, F., Isaacson, K, and Routh, A., 2026. 9. 21, B2B Payments: A Gradual Shift from Checks to Electronic Payment Methods.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Payments Research Brief.

4 Department for Business & Trade, 2024, Understanding Variations in Payment Performance and Practices across Business Sectors and Siz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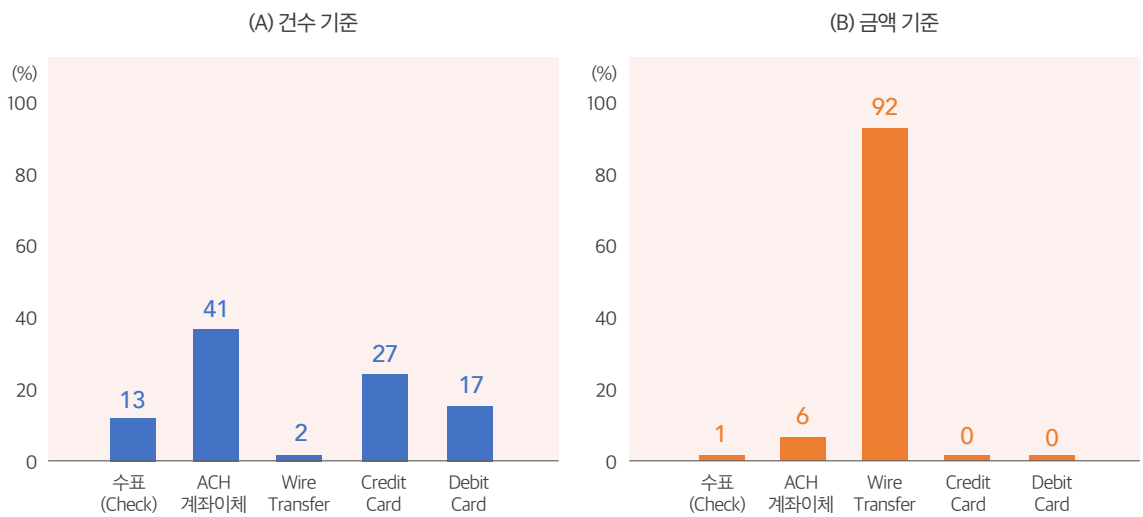


악된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지급수단 이용 양상은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 양상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정부의 2024년 기업 지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현금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머지 29%가 현금 지급을 수용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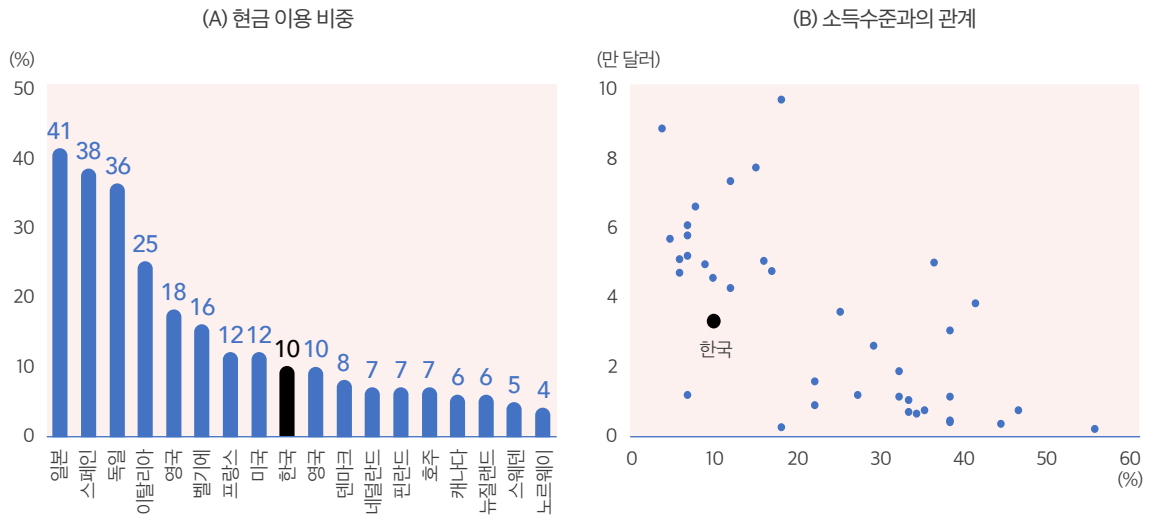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의 이용 양상은 국가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시스템이 잘 발달된 국가일수록 오프라인에서 현금 이용 비중이 낮

<그림 1> 미국의 기업 간 거래에서의 지급수단 이용 현황(2024년 기준)



주 미국의 Wire Transfer는 Fedwire 또는 CHIPS를 통해 자금이체 건별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전자적 자금이체 서비스
자료 Albers et al.(2026. 9. 21.)

<그림 2> 전력수요 증가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자료 한국은행(2025)

은 경향을 보인다.[5]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현금 이용 비중이 10%로 보고된다. 개인의 온라인과 모바일 지급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현금 이용이 빠르게 사라지는 데에는 디지털 지급 플랫폼의 등장도 한몫했다. 과거에는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가 번거롭고 불편해 소액의 경우 개인 간 자금 이전에 현금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핀테크의 발전과 디지털 지급 플랫폼의 확산으로 계좌이체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개인 간 자금 이전에서도 현금 이용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93개 중앙은행 중 91%가 소매용 또는 도매용 CBDC를 연구·검토하고 있다.[6]

민간에서는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미국에서 2025년 7월에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가 제정된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디지털 자산 거래를 넘어 일상적인 소매결제와 국가 간 자금 이전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전과 다른 점은 지급방식의 혁신을 넘어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과 이전이 가능한 화폐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지급혁신이 현금의 이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과 확산은 현금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더 이상 현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7] 디지털 지급수단처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또는 사적 이익 추구 경쟁으로 디지털 화폐가 범용화할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선택과 이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지고, 현금이나 디지털 지급수단의 이용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 없는 사회는 과연 현금 있는 사회보다 인류에게 더 나은 사회일까? 이를 위해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까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경제적 선택에 따라 현금 이용이 감소하는 것과 제도적 강제로 현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져올 편익은 분명하다. 현금의 발행과 유통, 보관 및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급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8] 현금이 발행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제약이 약해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까지 낮출 수 있다.[9] [10] 이는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금리의 하락이 국채 발행금리에도 반영되면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정운용의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이 현금의 소멸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전이나 통신장애, 금융시스템의 마비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계좌이체, 지급카드뿐 아니라 앞으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이용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지급이 수반되는 모든 경제활동과 금융 활동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디지털 화폐가 범용화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금은 일단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현금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할 수 있다. 한 예로, 가장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운 스웨덴은 중앙은행인 릭스방크(Riksbank)가 비상시 약 일주일간 사용할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인 1명당 약 1,000스웨덴크로나(SEK)를 여러 액면의 지폐와 동전으로 보유할 것을 공식 권고하는 등 현금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복구 및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11]

따라서 돈의 미래는 현금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불편한 현금을 가장 유리한 지급수단이 되도록 강제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12]

---

5 한국은행, 2025,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6 Illes, A., Kosse, A., and Wierts, P., 2025, Advancing in tandem - results of the 2024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BIS Papers No. 159.

7 Pani, M. and Maino, R., 2025, Could Digital Currencies Lead to the Disappearance of Cash from the Market? IMF Working Paper WP/25/56.

8 중앙은행 주도의 CBDC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중 어느 디지털 화폐가 지배적이냐에 따라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본 고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

9 Nagel, J., 2026. 6. 22, New forms of money and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Speech at the 202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yments and Securities Settlement.

10 현금의 명목수익률은 0%이다. 이 때문에 은행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예금 대신에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도 마이너스 금리 제약을 받게 된다.

11 https://www.riksbank.se/en-gb/press-and-published/notices-and-press-releases/press-releases/2026/new-recommendations-for-public-payment-preparedness

12 현금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이나 기업의 지급수단 선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지급수단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왜곡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현금이 과소 이용될 수 있다. 지금도 현금이 제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급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현금이 과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의 살림살이(1)
궁궐 안 왕실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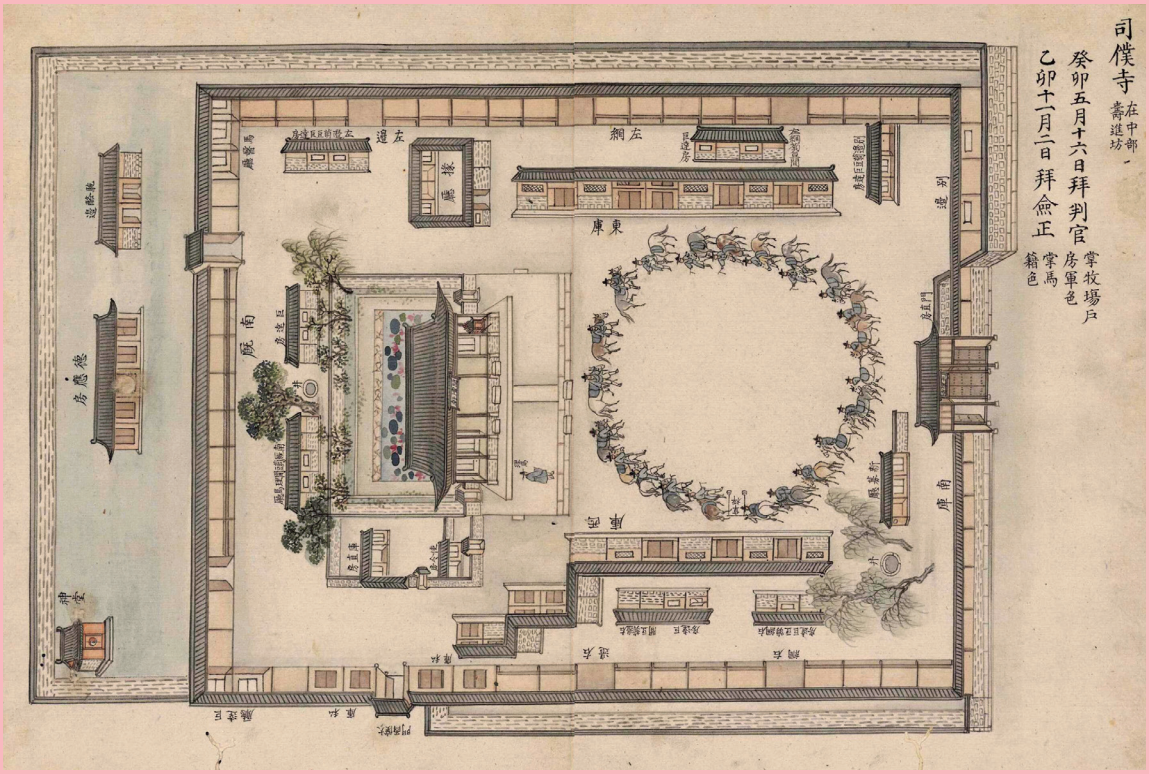
지난 호에서는 영조가 균역법 시행기 『탁지정례(度支定例)』와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의 간행을 통해 긴축재정의 구조적 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살펴보았다. 영조의 재정 개혁은 국왕 개인의 검약을 넘어서서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왕실재정의 자의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특히 왕실재정을 공적 시스템 하에 관리하려는 국왕 영조의 의지가 정례서에 강하게 반영되었기에, 정례서는 지출례로서 강한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다. 전근대 왕조 국가 중에서 이처럼 왕실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규모 자체를 줄이고자 노력한 왕조는 흔치 않다. 이번 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왕실재정'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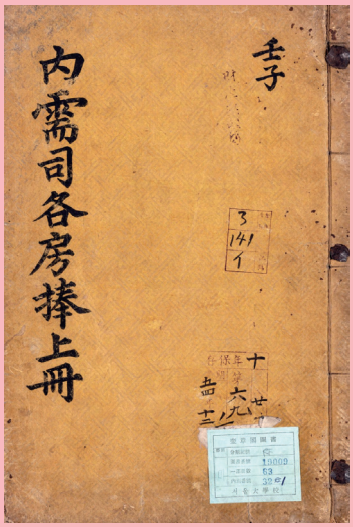
조선시대 궁궐 안 왕실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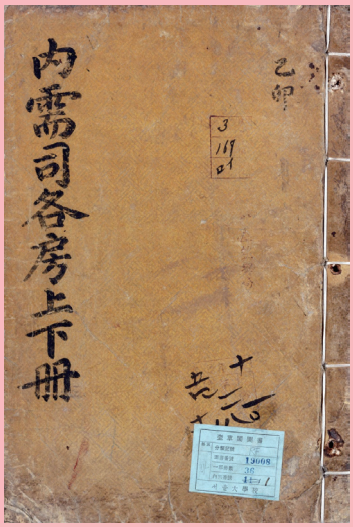
전근대 왕조 국가들은 국왕과 그의 가족을 '왕실'로 규정하고 신분적 특권과 경제적 처우를 보장했다. 왕조의 존속을 위해 국왕은 혈통에 기반한 권력의 승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했으며, 왕실은 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왕과 혼인·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친족 구성원을 어디까지 왕실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왕실의 족내혼 전통으로 혼인 및 혈연관계가 중첩되고, 국왕에 대해 복수의 친속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부계 중심의 단선적인 계보만으로 왕실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1] 조선왕조가 들어서고 유교적 종법 질서 하에 족외혼, 친영의(親迎儀) 전통이 만들어지면서 태조 이성계의 직계, 방계 후손 및 친인척에 기반한 왕실의 범위가 새롭게 정리되어갔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왕실 범위는 사실상 조선시대에 정립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조선의 왕실 역시 대수가 이어지면서 후손들과 친인척의 범위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 역시 어디까지 왕실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특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왕실로 예우해야 하는 가족, 친족 범위를 나누어 이들을 관리하는 정1품 아문[종친부·돈녕부·의빈부]을 따로 두고, 이들에게 작호(爵號)와 품계(品階)를 차등 부여하는 한편, 그에 따른 녹봉과 토지, 노비를 하사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다만, 세 아문에 속하는 친족들만으로 궐에 사는 왕실의 핵심 구성원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

1 황향주, 2022, 『10~13세기 高麗 王室의 構造와 編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그림 1>
사복시 관아도『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한필교, 1880)
조선시대 대표적인 궐내 공상아문이었던 사복시 관아도이다. 사복시는 왕실과 군사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국용 말을 기르고 관리하였다.
(원소장처: 하버드옌칭도서관,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2>
『내수사각방받자책(內需司各房捧上冊)』과
『내수사각방차하책(內需司各房上下冊)』
(내수사 편, 18~19세기)
내수사의 각방별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놓은 회계장부이다. 내수사는 국왕의 사적 금고[內帑]로서 왕실 사재정을 관리하던 기구였다.
(소장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內需司
社稷洞
內資寺
南門峴
社稷
崇政殿
訓局
新營
內贍寺
義盈庫
司饔院
中樞府
承政院
內醫院
內侍府
內贍寺
內贍寺
內贍寺

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을 궁궐 안에 사는 가족과 궁궐 밖에 사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분리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실은 바로 궁궐 안에 사는 국왕의 직계가족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극에서 흔히 마주하는 국왕의 할머니[大王大妃]와 어머니[王大妃], 부인[妃·嬪], 아들[大君·君], 딸[公·翁主]들이 이들이다. 실제로 왕실의 핵심 구성원은 궐 안에서 생활하는 국왕의 직계가족 4대로 압축된다. 다만 국왕이 죽고 세자가 즉위하게 되면 4대의 위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선왕의 후궁들은 세자가 즉위한 후에는 궐을 나와 별도의 거처인 자수궁(慈壽宮)과 인수궁(仁壽宮) 등에서 머물거나 친족이 있는 사가에서 생활하였다.[2] 국왕이 죽기 전이라도 국왕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세 전후로 가례를 치르고 궐 밖으로 나가 생활했다. 이를 '출합(出閤)'이라 한다. 반대로 국왕의 계비(繼妃)와 후궁, 세자빈의 경우 가례를 통해 왕실 가족에 새롭게 편입돼 궐에서 생활하였다.

정리하면, 조선시대 좁은 의미의 왕실은 궐 안에서 생활하는 '대왕대비-왕대비-국왕·비빈 이하 후궁-세자·빈 이하 후궁', 혹은 '왕대비-국왕·비빈 이하 후궁-세자·빈 이하 후궁-세손'의 4대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가족 형태라고 하겠다. 조선왕조가 국가재정으로 매일 먹고 쓰는 물품을 제공하는 이들도 바로 궐 안에서 생활하는 국왕의 직계가족이었다. 그러면 궁궐에 사는 왕실 가족이 먹고 쓰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왕실 가족의 생활비 규모

조선왕조는 궐 내에 생활하는 이들 왕실 가족을 부양하고, 사망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공상물자를 별도의 관서를 두어 마련하였다. 이를 '공상아문(供上衙門)'이라 한다. 『경국대전』에는 왕실의 사적 금고라 할 수 있는 내수사를 비롯해 공상아문을 19개로 규정해 놓았다.[3] 예컨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옹원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진상 물선을 검수, 수납하는 한편, 궐 안 각 전·궁 소속 수라간과 소주방 등을 관리, 감독했다. 상의원은 각 전·궁의 법복과 예복은 물론, 침구와 장신구 등을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사복시는 국용 말을, 의영고는 기름과 꿀을, 장흥고는 돗자리와 기름먹인 두꺼운 종이를 때마다 진배했다. 장원서와 사포서의 경우 각종 과일과 채소를 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늘날 광화문 주변 정부청사 자리에 조선시대 공상아문이 즐비하게 자리하여 왕실 부양에 필요한 물품을 부지런히 실어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호에 언급한 『탁지정례』(각전각궁례)와 『선혜청정례』는 왕실 각 전·궁에 진배하는 이들 공

2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두 궁이 쇠락한 데다가 선왕 후궁의 거처보다는 비구니 사찰로서의 성격이 커지자 결국 현종 2년(1661) 국왕의 명에 의해 두 궁이 공식 폐지되었다. 두 궁에 속해 있던 비구니들은 환속되었으며, 이후 선왕의 후궁들은 궁궐을 떠나 사가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한희숙, 2019, 「조선시대 선왕 후궁에 대한 처우와 궁가(宮家)의 변천」, 『여성과 역사』 30 참조). 다만, 인수궁의 경우 18세기까지도 공상물자를 지원하는 기사가 확인되고 정례서에도 인수궁의 공상가가 책정되어 있어, 현종대 인수궁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경국대전』 이전조에 수록된 공상아문은 봉상시, 사옹원, 상의원, 사복시,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선공감, 사재감(이상 정3품), 내수사(정5품아문), 사온서, 의영고, 장흥고(이상 종5품아문), 장원서, 사포서, 전생서, 사축서(이상 정6품)이다. 조선후기에는 군기시, 와서, 관상감, 공조, 내의원, 경기감영 등 시장에서 공상물자를 사서 조달하는 관서가 늘어났다(송수환, 2002, 『조선전기 王室財政硏究』, 집문당, 293~307쪽 ; 최주희, 2014,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4~90쪽).

상아문의 물자를 우선 삭감하고 정액화한 지출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왕실공상에 지출되는 액수는 실제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탁지정례』(각전각궁례)와 『선혜청정례』에 규정해 놓은 공상가의 최대 규모는 쌀 79,212석 규모였다.[4] 영·정조 대 선혜청의 세입 규모가 대략 25만~30만석 수준이었다고 할 때, 왕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만 26.4~31.7%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순조가 친정 후 야심 차게 간행한 『만기요람(萬機要覽)』(1808)이라는 재정 백서를 살펴보면, 당시 왕실 공상에 할애된 비용은 74,028석으로, 정례서 기준(79,212석)보다 5천 석 정도 적게 집행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전체 공물가 중 대략 1/3 안팎의 대동미를 왕실 가족의 부양에 썼다고 하면, 왕실재정의 비중이 너무 컸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왕실 각 전·궁에 책정한 공상가가 순수하게 왕실 가족이 먹고 쓰는 데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탁지정례』(각전각궁례)와 『선혜청정례』의 내역을 살펴보면, 각 전·궁에 할애된 공물가의 절반 정도가 그들을 모시는 궁녀들의 식대와 옷값으로 지출되고 있었다.[5] 왕실공상가에 왕실 가족뿐 아니라 궁궐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던 궁녀들의 생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째, 공상가를 국가의 전체 재정 수입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중앙 세입은 ①호조에서 거두는 전세(법정세)와 대청무역을 통한 은 수입, ②선혜청의 대동세(법정세), ③병조와 군문의 군포(법정세), ④균역청의 어염선세·결전(結錢) 수입(법정세), ⑤마지막으로 재정관서에서 운영하는 환곡의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조, 선혜청과 같은 공식적인 재정아문 외에도 병조와 군문의 군포 수입이 군사재정의 영역으로 토지, 공물 재정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혜청의 수입은 왕실과 정부 관서의 일반 경상비로 쓰이는 핵심 세목(稅目)이었던 것은 맞지만, 전체 재정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실제 중앙재정의 총수입은 얼마나 되었을까? 대동법 시행 이후로도 현물공납과 진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 중앙재정 규모를 단일 수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고종 대 초반 『대전회통(大典會通)』과 함께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상에, 122개 중앙관서의 수입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쌀값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중앙의 전체 재정수입은 대략 쌀 100만 696석 규모였으며, 이중 선혜청 수입은 263,065석으로 집계되어 전체 수입 가운데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조선후기 법정 세율이 19세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세입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7] 실제 선혜청의 수입 구간 역시 18세기 평균 세입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18세기 중반 정례서 상의 공상가 79,212석과 19세기 초 『만기요람』 상의 공상가 74,028석은 비록 19세기 중반의 쌀 환산가이기는 하지만, 약

4 최주희, 2018, 「1826년 『예식통고(例式通攷)』의 편찬과 왕실재정의 정비 노력」, 『역사와 현실』 107, 291~292쪽 참조.

5 최주희, 2012, 「18세기 중반 定例類에 나타난 王室供上의 범위와 성격」, 『藏書閣』 27 참조. 조선시대 궐에서 생활하는 궁녀의 숫자는 영조 대 대략 600명 규모로 언급되고 있다(홍순민, 2004,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 265쪽 참조).

6 김재호, 2007,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육전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3, 9~11쪽 참조.

7 환곡의 이자수익의 경우, 18세기 후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연구성과로는 그 비중을 구체적인 수치로 특정하기 어렵다.

100만 석의 전체 재정수입 대비 대략 7.4~7.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8] 요컨대, 궐 안 왕실 직계가족 4대에 국가재정으로 공식 할애한 예산은 7%대 수준이었으며, 이중 절반가량의 액수는 그들을 부양하는 궐 내 궁속들의 생활 경비로 지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궁궐 안 왕실 가족이 재정 관서에서 할당해 놓은 비용 안에서 빠듯하게만 생활했던 것은 아니다. 짐작하듯이 왕실 가족에게는 각자의 쌈짓돈이 있었다.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한국과 중국의 왕조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영토 내의 모든 문물이 이념적으로는 왕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소위 『시경』「소아·북산」편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溥天之土 莫非王土]'는 표현은 한반도 통일 왕조들의 토지제도에 관통하는 철학이었다. 유교의 통치 철학에서 국왕은 정복 전쟁으로 패권을 쥐고 신민을 수탈하는 폭력 군주가 아니라, 왕도정치를 바탕으로 물화를 재분배하는 도덕 군주로 이상화되었다. 국왕 자체를 공적 권위자로 보았기 때문에, 국왕의 영토는 곧 신민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공적 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왕은 국가의 수장인 동시에 왕실의 가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왕실에 특권을 용인하고 이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간의 긴장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국왕은 이념상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다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왕실 가족과 관료들에게도 토지를 나누어 주어 수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를 보통 '수조권(收租權)'이라 하며, 고려시대에는 왕실 구성원에게 궁원전(宮院田)이나 장처전(莊處田)과 같은 수조지를 내려주었다. 고려후기로 갈수록 수조지가 줄어들자 조정에서는 사적 금고인 '왕실부(王室府)'를 운영하도록 해주었다.[9] 고려에서는 이처럼 왕토사상의 이념적 틀에서 왕실의 사재정을 다각도로 허용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왕실 사재정의 영역을 축소 정비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실제로 태조 대부터 세조 대에 이르기까지 관제개혁을 단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새 왕조의 건국이념에 맞게 전 왕조의 유제(遺制)를 개선해갔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사장고 역할을 했던 왕실부(王室府)를 점진적으로 혁파하는 한편, 기존의 공상아문을 통폐합하여 국가의 공적 재정체계로 편입시켰다.[10] 왕실에 제공하는 공상물자의 상당수를 국가예산 하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대신 이들에게는 과전법 규정하에서 수조지가 새롭게 지급되었다. 그런데 왕실재정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왕실 사장고로서 살아남은 관서가 있다. 바로 국왕의 사적 금고라 할 수 있는 '내수사(內需司)'이다. 여기에 조선후기 들어 왕실의 사장고라 할 수 있는 '궁방(宮房)'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었다.

8 물론 여기에는 죽은 선대왕들의 제사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왕실재정은 이보다 규모가 컸을 것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선혜청에서 궐내 각전·궁에 별도로 지급한 공물가가 쌀로 약 4,112석 정도가 더 확인되는데, 이는 공식 공상가로 보기는 어려워 제외하였다(『만기요람』 재용편 1, 각공(各貢)). 다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19세기 초 궐내 왕실 가족에게 정부에서 제공한 공식 비용은 78,140여석(7.8%) 정도로 확인된다.

9 이정란, 2010, 「고려·조선전기 왕실부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방식의 변화」, 『韓國史學報』 40 참조.

10 송수환, 2002, 앞의 책, Ⅰ·Ⅱ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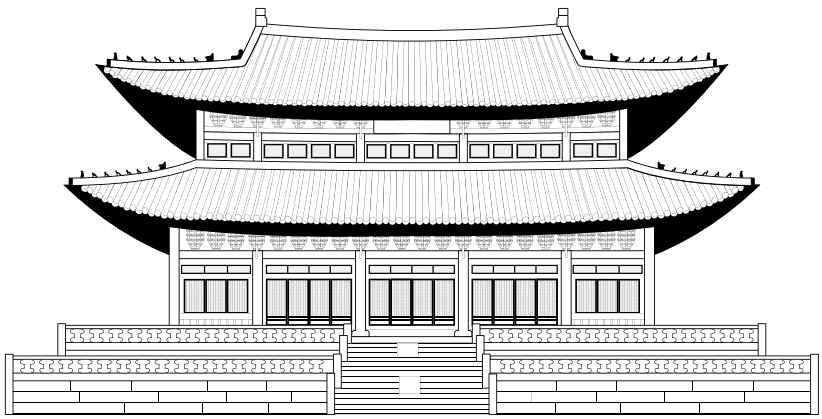
왕실의 쌈짓돈, 내수사와 궁방

내수사는 태조와 태종이 소유하고 있던 함흥, 영흥 본궁의 재산과 고려 왕실의 장토 등을 귀속시켜 관리하던 관서이다. 세종 5년(1422)에 '내수소'로 설치되었다가 세조 12년(1466) 내수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경국대전』 상에 정5품 공상아문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관료들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기까지 명맥을 유지한 내수사는 중앙관서 중 유일하게 국왕 최측근인 내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 조직이었다. 물론 내수사가 국왕의 금고였다고 해서, 국왕이 원칙 없이 마구 전용했던 것은 아니다. 내수사 내부에도 토지 수입을 관리하는 호방(戶房)과 제사 업무 및 지출을 담당하는 예방(禮房), 노비 신공을 관리하는 형방(刑房), 궁궐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방(工房)이 분업 구조를 띠고 있었다. 내수사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토지에서의 수조(收租)와 노비에게서 받는 신공(身貢), 기타 어염세 등이 있었다. 1801년 내노비(內奴婢: 내수사 소속 노비)가 공식 폐지된 후로는 노비공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토지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내수사는 왕실의 기도처[원당]이자, 능침 관리[陵寢寺: 능원묘를 관리하던 사찰] 및 제수품 조달을 맡은 사찰[造泡寺: 두부를 조달하던 사찰]들과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왕은 내수사를 통해 함흥·영흥 본궁의 제수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왕실 가족과 친족에게 때때로 생활비와 물품을 지원해주었다. 또한, 기근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무하거나 국가에 공적을 쌓은 신민을 격려하는 데에도 내수사의 내탕금을 자주 활용했다. 그러면 내수사의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됐을까?

내수사의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현재 『내수사각방받자책(內需司各房捧上冊)』과 『내수사각방차하책(內需司各房上下冊)』이 남아 있다. 하나는 세입, 다른 하나는 지출을 정리한 회계장부이다. 이중 받자책은 1793년부터 1899년까지 중간 결락을 제외한 총 45개 연도의 내역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내수사의 수입을 살펴보면, 동전가로 최소 23,734냥에서 최대 323,901냥으로 등락폭이 큰 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입이 적을 때는 6만~8만 냥, 많을 때는 12만~18만 냥 대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11] 이는 쌀값으로 환산하면 쌀 1.2~1.4만석, 2.4만~3.6만석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왕에게 내수사가 있었다면, 왕대비를 비롯한 왕실 가족에게도 별도의 사장고가 있었다. 명종 대 과전법 체제가 해체되면서 왕실 가족에게 분급되는 수조지



역시 사라졌다. 이에 궐 밖에 사는 왕자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황무지 개간과 어염 절수 등을 통해 재산을 늘려나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궐 밖에서 독자적인 재정 주체로 역할을 한 왕실을 따로 '궁방(宮房)'이라고 한다.

본래 궁방은 그 자체로 후궁과 대군·왕자군, 공·옹주를 예우하는 존칭이자, 이들이 생활하는 궁가를 일컫는 말이었다. 조선후기 들어서는 대를 잇지 못한 후궁이나 궐밖에서 생활하는 왕자녀들에게 생활물자[供上]를 제공하고, 이들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궐밖 궁가(宮家)를 통칭하는 말로 쓰였다. 현재 확인되는 조선후기 궁방은 총 68개로, 이중 명례·용동·수진·어의궁은 특별히 궐 내 대비와 중전, 세자 등이 관리하던 궁방이었다. 이 4궁은 1907년 왕실 재산이 모두 정리되기 전까지 영구존속한 핵심 궁방으로서, 왕실 가족의 내탕으로도 활용됐다.[12] 이들 궁방의 재산은 보통 그에 속한 궁녀들이 관리했으며, 제수품 조달과 원역들의 인건비 등 고정 지출 외에 각 전·궁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1사 4궁으로 대표되는 왕실 사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현존하는 4궁 역시 받자책과 차하책이 남아있어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를 통해 1860년 한 해 4궁의 재정수입을 쌀 환산가로 집계해 보면 41,649석 정도로 확인된다.[13] 앞의 내수사 수입과 이를 합쳐보면 많게는 전체 1사 4궁의 수입은 대략 5.3만~7.7만 석 구간에 있다고 하겠다. 궐 안 왕실 가족의 생활 자금으로 앞서 7.9만 석 이내의 공적 공상 비용 외에 평균 5.3만~7.7만 석의 사적 공상 비용(제수 비용 포함)이 별도로 주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궐 안 왕실 가족에게 비교적 많은 액수로 제공된 공상액은 선대 왕실 가족을 기리고, 현재 왕실 가족의 품위를 유지하며, 이들을 모시는 궁인들의 생활 비용으로 쓰였다. 이것이 조선후기 왕조 국가의 핵심 구성원이 누리는 경제적 특권의 진면목이다. 혹자는 소수의 왕실 가족에게 너무 큰 수입이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왕실 가족의 특권적 수입에 대해 국왕 스스로 어떠한 통제 및 긴축의 조치들을 취했는지 좀 더 살펴본다면, 이들을 사치와 부패의 원흉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궁궐 밖의 왕실 가족 및 친족들의 살림살이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고, 정례서 간행 외에 왕실 재정에 대한 조치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

11 유현재, 2025, 「조선 후기 내수사의 재정 운영과 그 성격」, 『南溟學硏究』 85, 640쪽, <그림 1> 참조.

12 조영준, 2008,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31권 3호, 281~282쪽.

13 조영준, 2009,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 1860년대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7, 222쪽.

성재 이시영, 나눔으로 지탱한 재정

개인의 헌신과 연대로 유지된 임시정부의 재정구조

나라를 잃은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국가의 살림을 꾸려갔을까. 지난 호에서는 성재 이시영의 삶과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 자금의 조달과 배분, 임시정부의 재정 운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시영의 삶을 관통한 선공후사와 청렴결백, 대의실천의 정신에 주목한다. 개인의 헌신과 동포들의 연대가 어떻게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를 지탱했는지, 그 안에 담긴 재정윤리와 오늘날 국가재정에 주는 교훈을 짚어본다.

정경환 동의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이름	이시영(李始榮)
호	성재(省齋)·시림산인(始林山人)
생몰연도	1868년 12월 3일~ 1953년 4월 17일(84세)
국적	대한민국
활동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주요 사건	일제강점기 때, 가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신민회, 신흥강습소, 한국독립당 등을 조직하였고, 해방 이후,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여 사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본관	경주(慶州)

서언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서 재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된다. 아무리 국가의 이념이 숭고하고 정치적 이념이 원대하고 분명하다고 해도 이를 실현할 재정적 기반이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운영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재정은 국가운영에 가장 중요한 현실적 구성요소라고 칭해진다. 국가는 재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재정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경제적 행위로서 국한되지 않고 정치철학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은 단순히 자본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경제정책의 차원도 지니지만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만석의 부를 버리고 조국을 찾으신 구국의 횃불,
성재의 그 거룩한 비움이 대한민국에 남아 영원할 것입니다."
– 시민 김○승 –

국가의 정치적 가치와 목표 그리고 윤리적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재정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재정의 정치철학적 구성요소로서 대표적인 부분은 개인(개체)과 공동체(국가) 간의 관계,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헌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기 힘들고 반드시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재 이시영은 일생 국가와 정부라는 전체(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개인적 행복을 뒤로한 채 헌신한 인물이다. 본 글에서는 이시영의 일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삶의 철학과 재정윤리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재정의 책임자로 행한 역할과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과 재정윤리

한 인간의 삶의 철학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으로 그의 사상과 철학의 구체적인 실천의 근거로 작용한다.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은 자신의 사상과 삶 간의 연대성으로 표현된다. 그는 과연 어떤 삶의 철학으로 84년의 삶을 영위했는가? 필자는 성재의 84년 삶 전체와 그의 저서 및 글들 그리고 많은 담화와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삶의 철학은 크게 선공후사의 정신, 청렴결백의 정신 및 대의실천의 정신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정도, 용기, 배려, 강직, 겸양 등의 정신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의 삶의 철학을 기초로 성립된 그의 재정윤리는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론, 재정의 조달과 운영상의 투명론 및 재정집행의 대의적 목적론과 집행론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

첫째, 그의 삶의 철학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선공후사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이다. 다음으로 선공후사의 정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예를 들면 국가나 민족)를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의 삶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개인 역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공동체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는 한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에 의거한다.

성재 이시영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데 대해 저명한 사학자였던 이현희 교수가 명확하게 설파하고 있다. 그는 이시영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애국자가 있다. 성재 이시영과 같이 순수한 애국과 공과 사를 구분하여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킨 정통성의 산증인은 흔치 않다. 위대한 애국지사 성재 이시영은 한나라, 한겨레, 한얼을 위해 부귀와 영달의 길을 과감히 버렸다"라고[1] 언급하고 있다. 그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이시영의 형제 6형제가 누대로부터 내려오던 가산을 비밀리에 정리하고 이역만리 만주로 망명한 것은 선공후사의 정신이라는 그의 삶의 철학에 의거한 것이다.[2]

둘째, 그의 삶의 철학은 청렴결백의 정신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청렴결백의 정신은 우선 사적인 욕망과 부당한 이익을 멀리하고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렴결백의 정신은 공직자로서 공적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직을

---

1 이현희, "위대한 한국인, 건국의 원훈 부통령 성재 이시영," 『새길』 291호(법무부, 1987), p.79. 이현희 교수(1937~2010)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가이다.

2 이시영을 비롯한 6형제의 극적인 탈출과정은 이은숙,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 서간도 시종기』(서울: 인물연구소, 1981), pp.46-49 참조. '합방직후 6형제 솔가(率家)해 망명길에' 중. 이은숙(1889~1979)은 이시영의 형인 애국지사 이회영(1867~1932)의 부인이다.

이용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뜻한다. 일생 공직자로서의 삶을 영위한 성재 이시영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실천했고 그 어떠한 부정과 부패와 연루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1951년 5월 10일 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행한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에서도 "탐관오리는 도비(都鄙)에 발호하여 국가의 존경을 모독하여서 신생민국의 장래에 영향을 던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며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라고[3] 통탄하고 있다. 또한, 1952년 7월 27일 대통령 출마 성명서에서 이시영은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들 특권계급의 이권의 대상이 되어 함부로 용단되고 그 결과 산업은 나날이 황폐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은 헐벗고 굶주리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개선할 수도 없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특권정치요 또 특권경제인 것입니다. 폐풍을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국민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4] 특권정치와 특권경제의 폐풍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그의 청렴결백의 정신이라는 삶의 철학에 의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그의 삶의 철학으로서 대의실천의 정신을 지적할 수 있다. 대의(大義)란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이고 정당한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대의실천이란 대의적 가치를 현실적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식과 사상은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발현된다. "사상은 행동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 실천에 의하여 다시금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리하여 발전된 사상은 또다시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의 행동을 요구한다."라고[5] 언급한 박종홍 교수의 언급은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그는 모든 행동의 기준을 대의에 두었다. 그는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부통령직 사임 성명서에서 대의에 의거해 자신의 단호한 결기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매양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일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직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에 그렇지 못할진대 부질없이 공위(空位)에 앉아 허영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떳떳하고 마땅한 일일 것이다."[6], "실천은 인간의 인간다운 보람 있는 행동"이라고[7] 한 박종홍 교수의 언사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생각한다. 성재 이시영은 대의를 관념 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현실에서 실천하는 실천주의자 내지 행동주의자였다.

3 『동아일보』, 1951년 5월 11일자. '이시영 부통령, 국민에게 고하는 성명서' 중.
4 『경향신문』, 1952년 7월 30일자. '정부통령 입후보자, 출마의 변 발표' 중.
5 박종홍, 『현실과 구상』(서울: 박영사, 1963). '사상과 행동' 중. 박종홍 교수(1903~1976)는 한국의 1세대 철학자이다.
6 『동아일보』, 1951년 5월 11일자. '이시영 부통령, 국민에게 고하는 성명서' 중.
7 박종홍, 앞의 책, p.187. '행동에서 실천으로' 중.

(2) 성재 이시영의 재정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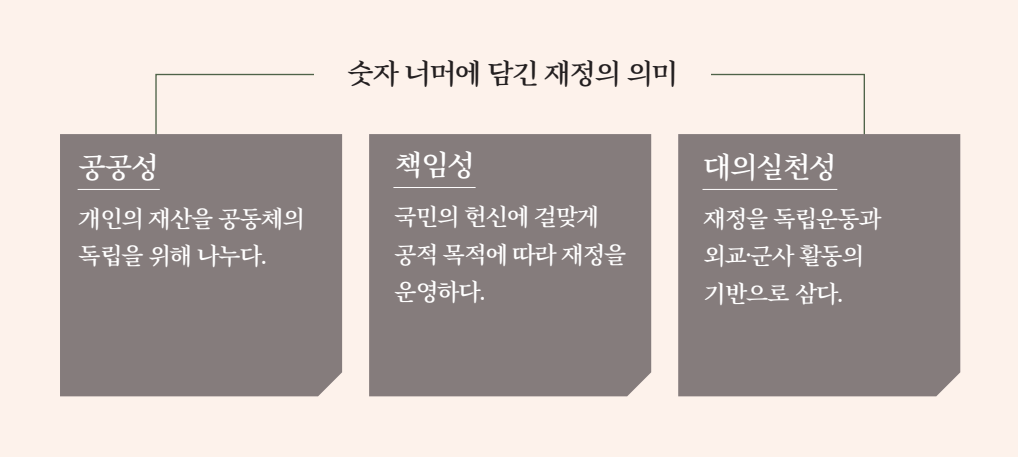
재정윤리는 재정철학의 외연적 개념으로 재정철학이 재정 전반에 대한 철학적 사유체계라고 한다면 재정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행위 주체들의 윤리적 규범 내지 실천윤리를 총칭한다. 아무리 국가의 현실적 작용태인 정부가 재정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려고 해도 행위 주체들의 재정윤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의 문제를 도출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하다. 이런 점에서 재정윤리는 재정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재 이시영의 재정윤리는 자기 삶의 철학과 인식체계 및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시영의 재정윤리는 첫째,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론이란 개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윤리적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재 이시영을 비롯한 6형제가 경술국치 이후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은 이러한 재정윤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이시영의 재정윤리는 '재정의 조달과 운영상의 투명론'으로 명명할 수 있다. 재정의 투명성이란 재정의 조달과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리를 의미한다. 재정의 조달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과 부패가 발생한다면 재정활동의 도덕적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정의 투명성은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인 청렴결백의 정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성재 이시영의 재정윤리는 '재정집행의 대의적 목적론과 집행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재정의 대의적 목적론이란 재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의 대의적 집행론이란 이러한 목적이 단순히 관념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활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원리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재 이시영의 재정윤리는 선공후사, 청렴결백 및 대의실천의 정신이라는 삶의 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론은 재정의 공공성과 연결되고, 재정의 조달과 운영상의 투명론은 재정의 도덕성과 책임성으로 연결되며, 재정집행의 대의적 목적론과 집행론은 재정의 대의실천성과 연결된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서 본 임시정부의 재정구조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기 전 우선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개체와 전체의 관계이기도 하다. 개체가 없으면 전체도 없고 전체가 없으면 개체의 운명 역시 불행의 가도를 걷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개체와 전체는 상호 필연성을 갖는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체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기 쉽고 전체의 절대성을 강조하면 전체주의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전제, 즉 뿌리는 개체이고 개체의 울타리는 전체라는 개체와 전체 간의 상보성 내지 상합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재 이시영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를 우선시하였다. 그는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을 맡았으며 1942년 다시 재무부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의 재정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임시정부는 조세법률주의와 국민개납주의에 기초한 재정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일제의 국토 강점으로 정상적인 조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1919년 5월부터 1920년 11월까지 임시정부의 재정수입 중 인구세는 3%에 불과하였고 애국금이 65%를 차지하고 있었다.[8]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이시영의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1921년 6월 13일 작성된 '재무총장 이시영의 공독'에서는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의 재정적 지원과 임시정부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다.[9] 또한, 1923년 11월 5일 발표한 '재무총장의 포고'에서는 국경의 교통 두절과 재미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0]

8 신주백, 『청렴결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킴이 이시영』(서울: 역사공간, 2014), pp.74-75.
9 『신한민보』, 1921년 7월 28일자. '재무총장 이시영의 공독'
10 『독립신문』(상해 국한문판), 1923년 12월 5일, 제167호. '재무총장의 포고'

임시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194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42년 10월 25일 작성된 '재무부의 재정상황 보고'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중국 당국의 임시 보조비와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정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물가 폭등과 수입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재정수입에는 독립금, 인구세, 차입금 및 특별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1]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라는 개체가 자신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헌신과 연대의 정신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부의 지원과 차입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임시정부의 재정구조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재정의 공공성이다. 재정의 공공성이란 재정의 조달과 운영 및 집행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임시정부는 정상적인 국가와 달리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국내외 동포들의 애국금과 의연금 등 자발적인 재정적 헌신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는 성재 이시영의 선공후사 정신과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론이 재정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의 도덕성과 책임성이다. 재정의 도덕성과 책임성이란 재정의 조달과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적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존하였던 임시정부에서 재정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성재 이시영의 청렴결백 정신은 이러한 재정윤리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셋째, 재정의 대의실천성이다. 재정의 대의실천성이란 국가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당한 가치를 재정의 구체적인 집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재정은 정부조직의 유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 외교활동 및 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었다. 성재 이시영이 자신의 재산과 삶을 국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은 이러한 대의실천의 정신이 현실에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는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에 기초한 재정의 공공성, 재정운영의 도덕성과 책임성 및 국가독립이라는 대의실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과 국가라는 개체와 전체의 상보성 내지 상합성이 재정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역사적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임시의정원 V (국사편찬위원회, 2005), pp.143-147, '재무부 24년도 세입세출보고의 건'

맺음말: 현대적 의미

이상에서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과 재정윤리를 기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은 선공후사, 청렴결백 및 대의실천의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론, 재정의 조달과 운영상의 투명론 및 재정집행의 대의적 목적론과 집행론이라는 재정윤리로 연결되었다.

이를 기초로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공공성, 재정의 도덕성과 책임성 및 재정의 대의실천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라는 개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연대하였다는 점에서 개체와 전체의 상보성 내지 상합성이 실현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국가재정의 운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가재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이다. 둘째, 재정의 조달과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청렴결백과 도덕적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국가재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국가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대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결국, 국가재정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재정규모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도덕성과 책임성 및 대의실천성이라는 정치철학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국가재정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하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정당하게 사용하였는가에 있다. 이것이 성재 이시영의 삶의 철학과 재정윤리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구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대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자산 시대, 돈의 미래를 읽다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로 살펴보는 새로운 금융 질서”

『코어 스테이블코인』

박재현·박지수 저 | 한빛미디어(2026)

이 책은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과 진화부터 PayFi, AI 에이전트, RWA와 금융 인프라까지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의 모습을 살펴보는 책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결제와 정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 배경과 진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실제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달러·비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금융 질서도 함께 다룬다. 특히 PayFi와 스트리밍 머니를 중심으로 결제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비자·페이팔 등 글로벌 결제기업과 전통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흐름을 소개한다. 나아가 한국 금융 환경에 맞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운영 모델과 핵심 구조를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디지털 금융의 변화를 읽는 핵심 포인트

-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 디지털 자산으로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정산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 **PayFi와 AI 에이전트:** 결제와 금융 서비스가 자동화되면서 돈의 흐름과 금융 서비스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국내 금융 규제 환경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운영 모델과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다룬다.

10월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자산의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과 화폐의 모습을 살펴본다. 돈의 형태와 결제 방식에서부터 실물자산의 디지털화, 새로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화폐 질서까지 변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환경과 그에 따른 기회와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권의 도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의 종말』

오태민·손혜민 외 저 | 거인의정원(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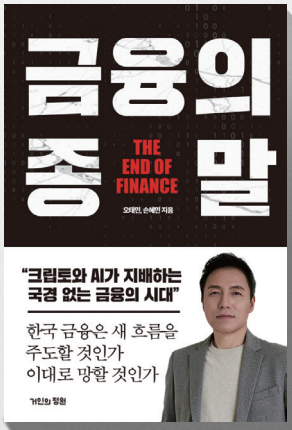
온체인 금융의 확산이 기존 금융의 경계와 작동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본다. 스테이블 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비롯해 AI 결제, 예측시장, 파라메트릭 보험, 영구선물 시장 등 새로운 금융 장치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도박·보험·파생상품·외환이라는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결제·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스테이블 코인과 온체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회사의 역할과 금융당국의 시장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한국이 변화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새로운 금융의 판을 설계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이 책은

크립토와 AI가 결합한 온체인 금융이 바꾸는 기존 금융의 경계, 새로운 금융시장의 설계자로서 한국 금융이 고민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책

새로운 금융 질서를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

- **경계가 흐려지는 금융:** 온체인 금융에서 도박·보험·파생상품·외환의 경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 **가격과 정산의 새로운 권력:** 금융의 경쟁력이 가격과 정산 규칙, 유동성,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플랫폼에 달려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금융시장의 설계자로서의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형 예측시장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통해 한국 금융의 대응 방향을 고민한다.





NEWS

2026 **October** vol. 118

한국재정정보원,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최



기획예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2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를 주제로,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성과를 점검하고 증거 기반 성과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재정성과관리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정원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2025년부터 재정사업 성과정보 확인·점검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7~2031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NEWS

2026 October vol. 118

한국재정정보원, ‘APEX 2026’ 후원 및 전문인력 훈련 참여·기술지원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지난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6(Allied Power EXercise)’에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국가재정 분야의 사이버안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4명을 현장에 파견해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훈련은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와 연계한 것으로,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정보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해 국가가 배후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방어 역량과 국제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재정원은 국가 핵심 재정 정보망을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지켜 온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침해 대응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훈련에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애독자 코너

• 2026.10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하는 'OOOOO'가 글로벌 금융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OOOO는 무엇일까요?

① 자산토큰화　② 디지털화폐
③ 금융인프라　④ 가상거래소

힌트!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과 관련된 힌트를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나라재정#dBrain+

응모

*응모기간 2026.10.26. ~ 11.11.

★ 지난호 정답: ② **성장주도형**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8687	010-*****-4777	
010-****-4566	010-****-2555	010-****-3533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정보 변경 및 기타 월간 『나라재정』과 관련한 궁금증은 02-6908-8632로 문의 바랍니다.


주최 | 주관
고흥군
Goheung-gun
고흥군축제위원회
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자 비타민으로
감기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감기없는
대한민국
2026
고흥유자축제
2026.11.12.목-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01-7번지 일원



FIS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Fax. 02-2288-6200 www.fis.kr
9 772508 897000 10
ISSN 2508-8971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October vol. 118

디지털 자산의 진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가져올 재정의 변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불러온 디지털 금융 혁신과 재정·통화 정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FIS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October
vol. 118

재정 NOW

04
재정 칼럼
예금토큰, 해법이 아니라 토대다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및 재정관리 혁신
-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특임연구위원

18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기준

22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8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2
재정 캘린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불러온 디지털 금융 혁신과 재정·통화 정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자산 토큰화(RWA)가 글로벌 금융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화와 거래 비용 절감이라는 기회 속에서, 통화주권 수호와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나라재정 10월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가져올 금융 시장의 변화와 재정 관련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주최 | 주관
고흥군
Goheung-gun
고흥군축제위원회
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자 비타민으로
감기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감기없는
대한민국
2026
고흥유자축제
2026.11.12.목-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01-7번지 일원